

# 부시 행정부의 대북 행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연구책임자 | 김 국 신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 부시 행정부의 대북 행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연구책임자 | 김 국 신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부시 행정부의 대북 행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인 쇄 2005년 12월

발 행 2005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동북아연구실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887)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7 (팩시밀리) 901-2543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가 격 5,000원

© 통일연구원, 2005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부시 행정부의 대북 행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 김국신 연구책임. — 서울 : 통일연구원, 2005

p. ; cm. — (연구총서 ; 05-20)

ISBN 89-8479-344-2 93340 : ₩5,000

349.42011-KDC4

327.7305193-DDC21

CIP2005002797

부시 행정부의 대북 행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목 차

I. 서 론 .....	1
II.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 유산 .....	5
III. 부시 행정부 출범과 제2차 북핵 위기 .....	17
1. 부시 행정부 초기 대북정책 .....	19
2. 테러와의 전쟁과 대북정책 변화 .....	28
3. 제2차 북한 핵위기 발생 .....	33
IV.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과 6자회담 .....	39
1. 대북 압박정책 .....	44
2. 1~3차 6자회담 .....	48
3. 대북정책에 관한 민주당의 비판 .....	51
V. 부시 2기 행정부와 북한의 핵보유 선언 .....	57
1.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	59
2. 북한 핵보유 선언과 미국의 반응 .....	62
3. 한국의 중재 활동 .....	68

VI. 제4차 6자회담과 향후 전망 .....	71
1. 제4차 6자회담과 공동성명 .....	73
2. 6자회담 협상의제 분석 .....	76
VII. 결 론 .....	93
참고문헌 .....	97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05



## 표 목 차

<표 III-1> 미국과 북한의 협상 관련 기본입장 .....	27
<표 IV-1> 공화당과 민주당의 선거쟁점 비교 .....	54
<표 VI-1> 6자회담 공동성명 주요 내용 .....	74



I

서론



1994년 10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네바합의를 체결한 이후 클린턴(William J. Clinton) 행정부는 북·미 고위급회담을 지속하며 관계개선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2001년 1월 부시(George W. Bush) 공화당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을 중단하고 북·미관계 개선에 보다 엄격한 조건을 부여하였다. 그 후 북·미관계는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9·11 테러사태를 계기로 더욱 악화되었다. 미국은 2002년 10월 대통령 특사를 북한에 파견하여 북·미대화 재개를 시도하였으나, 북한의 농축 우라늄 핵개발 문제로 인해 북·미관계는 오히려 새로운 위기국면을 맞게 되었다. 북한이 핵시설을 재가동한 이후 미국은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한편 남북한과 미국·일본·중국·러시아를 포함한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3차례에 걸친 6자회담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채 중단되었다.

2005년 1월 부시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의 대북 강경책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을 보이지 않자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공식선언하고 6자회담 불참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정동영 대통령 특사를 파견하여 북한의 6자회담 참가를 촉구하고, 대북 전력지원에 관한 중대제안을 발표하였다. 한국측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에 힘입어 제4차 6자회담이 재개되었다. 그리고 6자회담 참여국들은 2005년 9월 19일 북한 핵 포기, 북·미 관계 정상화, 북한 체제 안전보장, 대북 경제협력 등을 포괄적으로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본 논문은 먼저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실태를 검토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부시 행정부 초기에 제시된 대북정책 기조 및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에 따른 북·미관계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제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한 이후 미국이 추진한 대북 압박정책 및 6자회담 전개양상을 논의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부시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과 북한의 핵보유 선언 이후 대응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6장에서는 제4차 6자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 및 향후 협상의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 우리의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 유산





북한은 1985년 12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였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안전조치협정 체결은 기피하였다. 1992년 1월 IAEA의 핵안전조치협정에 가입한 북한은 동년 5월 핵안전조치협정에 따라 최초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 보고서에는 2년전 영변 원자로에서 과학적 실험을 목적으로 90그램의 플루토늄을 추출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IAEA는 동년 7월과 9월에 사찰을 실시한 후, 북한이 제출한 보고서가 정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찰당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 보고서에 기재한 것보다 훨씬 긴 기간 동안 재처리를 실시하였고 추출된 플루토늄 양도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sup>1</sup>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 추출량과 IAEA의 추정치간에 불일치가 발견되자 IAEA 이사회는 1993년 2월 북한이 신고하지 않은 2개의 의심장소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2개의 미신고시설이 군사시설로서 IAEA의 사찰대상이 아니며 제3국의 정보를 사찰에 이용하는 IAEA의 행위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면서 3월 9일 인민군에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3일 후 NPT탈퇴를 선언하였다. 그 후 북한은 IAEA와의 협상을 거부하며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한 핵문제 해결을 주장하였다.

북한이 1993년 3월 12일 NPT 탈퇴를 선언할 당시 새로 출범한 클린턴 행정부는 아직 내각을 완전히 정비하지 못하고 있었고 대외정책 방향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북한의 NPT 탈퇴선언에 직면하여 미국은 우선 북한과 1992년 12월 23일 제29차 접촉을 끝으로 중단되었던 북경 참사관 접촉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참사

---

<sup>1</sup> Joel S. Wit et. al., *Going Critical: The First North Korean Nuclear Crisi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4), p. 13.

관 접촉을 통해서 아무런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하자 클린턴 행정부는 그 후 협상수준을 격상시켜 달라는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여 핵문제 해결을 위한 고위급회담 개최에 합의하였다.

1993년 6월 2~11일 미국은 북한과 제1차 고위급회담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1993년 7월 14~19일 제2차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이 요구한 경수로 지원문제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1994년 4월 7일 미 국무부 정치·군사문제 담당 차관보 갈루치(Robert Gallucci)를 팀장으로 한 한반도정책조정팀을 신설할 때까지 미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IAEA의 사찰을 받아들여 이계 한다는 목표 이외에 북한으로 하여금 핵사찰을 수용하게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세우지 못했다.<sup>2</sup> 그 기간 동안 각 부처들은 경제제재 및 군사적 응징까지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였지만 모두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했다. 경제제재는 중국의 참여 없이는 효과를 볼 수 없는 방안이었고, 군사적 응징<sup>3</sup>은 한반도 전체를 폐허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무부 실무 최고책임자가 된 갈루치는 NPT체제 유지를 대북협상의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북한을 NPT체제에 묶어 놓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양보도 불가피하다는 협상태도를 취했다. 그리고 1994년 8월 5~12일 제3차 고위급회담에서 북한 핵개발의 과거 투명성 확보보다는 미래 핵동결에 중점을 두어 협상을 진행시켜 북한과 타협점을 찾았다. 그 결과 북·미 양국은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

---

<sup>2</sup> *Ibid.*, pp. 164~169.

<sup>3</sup> John M. Collins, *Korean Crisis, 1994: Military Geography, Military Balance, Military Options*, CRS Report for Congress (April 11, 1994), pp. 14~21.

한 북·미 기본합의문(Agreed Framework)을 체결하였다.<sup>4</sup>

제네바합의문에서 북한은 5MW 연구용원자로, 50MW 흑연감속로, 200MW 흑연감속로, 방사화학실험실, 핵연료제조공장 등 5개 핵시설을 동결하고, 동결상태에 대한 IAEA의 사찰을 허용하며 이들 시설을 경수로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완전히 해체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미국은 북한에 대해 중유 및 2,000MW 규모의 경수로를 제공하고 경제제재를 완화하며 점차 양국 관계를 정상화할 것을 약속하였다. 제네바합의 체결 당시 미 중앙정보국(CIA)은 북한이 1989년 영변 핵단지에 있는 5MW 원자로에서 핵무기 1~2개를 제조하기에 충분한 양인 12kg의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으로 추정하였다.<sup>5</sup> 그러나 제네바합의는 북한 핵개발의 과거 투명성 확보보다 미래 핵동결에 중점을 두고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 따라서 경수로의 주요 부품이 인도되는 시점까지 과거 핵개발 문제에 대한 의혹은 완전히 해소할 수 없었다.

클린턴 행정부가 발표한 ‘개입과 확대의 국가안보전략’은 탈냉전기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을 대량살상무기 확산, 지역분쟁, 구 사회주의권의 민주화 개혁 실패 위험성, 국가안보와 직결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

<sup>4</sup> 클린턴 행정부가 제네바합의를 조약(treaty)이 아닌 기본합의문(Agreed Framework)으로 처리한 것은 상원의 비준과정에서 비준이 거부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Bill Gertz, *Betrayal: How the Clinton Administration Undermined American Security* (Washington D.C.: Regnery Publishing Inc., 1999), p. 110.

<sup>5</sup> Larry A. Niksch,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CRS Issue Brief (Updated June 2, 1995), pp. 3~4; CIA, Nonproliferation Center, *The Acquisition of Technology Relating to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Advanced Conventional Munitions*, 1 January through 30 June, 1988 <[www.cia.gov/cia/publications/bian/bian.htm](http://www.cia.gov/cia/publications/bian/bian.htm)>.

위한 안보전략 목표를 강력한 군사력과 미군의 해외주둔을 바탕으로 한 안보능력 제고, 경쟁력 강화를 통한 미국 국내경제 회복, 그리고 구 사회주의권으로의 민주주의 확산 등으로 설정하였다.<sup>6</sup> 즉,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국제 관계에 적극 개입(engagement) 하며,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전세계적으로 확대(enlargement) 하는 전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당시 미국 안보전략의 이론적 기반을 제시한 레이크(Anthony Lake) 백악관 안보담당보좌관은 클린턴 행정부가 실용주의적 신윌슨주의(neo-Wilsonianism)에 기초하여 대외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sup>7</sup>

클린턴 행정부는 탈냉전기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에 미국의 지도력을 중요시하는 현실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세계적 균비축소, 다자간 안보대화 활성화, 유엔의 평화유지 지원 등 이상주의적 성향을 절충한 국가안보전략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제네바합의를 체결한 이후 ‘개입과 확대의 국가안보전략’에 입각하여 북한과 관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즉, 경제협력 등 적절한 유인책을 제시하여 핵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겠다는 대북정책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그러나 제네바 합의에 입각한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국내적으로 큰 비판을 받게 되었다.

1994년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한 이후 민주당 행정

<sup>6</sup> The White House,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July 1994).

<sup>7</sup> Douglas Brinkley, “Democratic Enlargement: The Clinton Doctrine,” *Foreign Policy* (Spring 1997), pp. 111~127; 이범준, “탈냉전기의 미국 외교정책: 클린턴 독트린의 이론과 실제,” 이범준 공저, *미국외교정책: 이론과 실제* (서울: 박영사, 1998), pp. 1~25 참조.

부와 의회관계는 협력보다 대립이 두드러졌다. 1995년 1월 제104기 의회가 개원되자 의회의 주도권을 장악한 공화당 의원들은 러시아 옐친정부 위주의 구 소련지역 국가에 대한 지원, UN 평화유지활동 적극 참여, 국방비 감축 등 클린턴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비판하였다. 특히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은 의회 청문회에서 이상주의적인 성향을 내포하고 있는 제네바합의를 강력히 비난하였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북한이 중유와 경수로 2기를 얻기 위해 핵개발을 완전히 포기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순진한 발상이라고 주장하였다.<sup>8</sup> 제네바합의에 대해서는 북한이 NPT를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핵개발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결시키기 위해 막대한 반대급부를 약속한 것은 다른 불량 국가들에 대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아울러 제네바합의가 국제적 조약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 형태로 추진된 것과 관련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미 의회 상·하원 의원들은 제네바합의가 많은 결함을 내포하고 있지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합의사항은 이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수 개의 결의안을 채택하여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 추진과정을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의사를 확고히 표명하였다. 1995년 3월 하원 국제관계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은 클린턴 행정부가 제네바합의 이행과정에서 북한측에 대해 남북대화 재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

---

<sup>8</sup> Benjamin A. Gilman, "Reality required for North Korea policy," *The Washington Times*, October 21, 1998.

비무장지대 북한군 병력 후방이동, 중거리 미사일 배치 금지, 핵· 미사일 기술 수출 금지 등의 요건들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것을 촉구하였다.<sup>9</sup> 아울러 대북 지원 및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sup>10</sup> 관련 예산지출은 해외원조법 규정에 따라 의회에 사전 통보할 것을 의무화 하였다. 상· 하원의 다른 결의안들도 대북 지원 및 KEDO 관련 예산지출을 의회의 승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핵· 미사일 관련 의무 준수, 남북관계 진전 노력 등을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이상의 관계개선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제네바합의 이후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완화하고 인도적 차원의 경제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미 의회의 결의안에 따라 북· 미 미사일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한· 미국· 중국의 4자회담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의 견제로 인해 대북 포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반면, 북한은 벼랑 끝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 및 북· 미 미사일협상 등 군사· 안보 분야에서의 협상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98년 8월 금창리 지하시설 핵의혹 및 미사일 실험발사 문제가 돌출하자 공화당 주

<sup>9</sup> 104th Congress, 1st Session H. J. Res. 83. 합동결의안(Joint Resolution)은 법률안(bill)의 경우와 같이 양원을 통과하여 대통령의 서명을 요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합동결의안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sup>10</sup> 한국· 미국· 일본은 1995년 3월 9일 대북 경수로 제공을 위해 국제 컨소시엄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 KEDO) 설립협정에 서명하였다. KEDO 회원국은 집행이사국인 한국· 미국· 일본· EU 4개국과 일반 회원국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핀란드· 인도네시아· 칠레· 아르헨티나· 폴란드 등으로 구성되었다.

도 의회는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였다. 이에 클린턴 대통령은 페리(William Perry) 전 국방장관을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임명하여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시작했다.

클린턴 행정부는 1999년 9월 15일 대북정책 방향을 보다 체계화시킨 페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공개된 페리 보고서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3단계 접근방식을 제시하였다.<sup>11</sup> 첫째,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해야 하며, 미국은 이에 상응하여 대북 경제제재를 일부 해제하고 일본과 한국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계획을 중단하고 이를 보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본은 물론 북한의 협조아래서 한반도에서의 냉전을 종식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핵·미사일 위협을 종식시키기 위해 북한의 협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미국은 대북수교를 포함한 관계정상화를 추진해야 하며,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과 공동보조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15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남한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공통성 인정, 8·15 친척 방문단 교환, 교류·협력 활성화, 남북 당국간 대화개최 등에 합의한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후 김정일 위원장은 북·미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을 모색하기 위하여 조명

---

<sup>11</sup> William J. Perry, *Review of United States Policy Toward North Korea: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Unclassified Report) (Washington, D.C., October 12, 1999).

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특사로 미국에 파견하였다. 조명록 특사는 10월 10일 클린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관계정상화를 요구하며, 북한 로켓의 제3국 발사를 위해 국제사회가 재정지원을 할 경우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고 정식 제안하였다. 조명록 특사는 올브라이트(Madeleine A. Albright) 국무장관 등과 회담을 개최한 후, 10월 12일 양국이 상호 적대관계를 포기하고 경제 교류·협력을 확대하며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하기로 합의한 북·미 공동코뮤니케를 발표하였다.<sup>12</sup>

북·미 공동코뮤니케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북한이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개발 포기 선언을 함으로써 북한 미사일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찾았다. 둘째, 양국이 상호 적대관계를 포기하고 경제 교류·협력을 확대하기로 함으로써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 및 경제지원을 약속받았다. 셋째,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4자회담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안을 활용한다고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클린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조만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합의하였다.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은 10월 23~25일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위원장과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미사일 개발, 외교 대표

<sup>12</sup> U.S. Department of State, *U.S.-D.P.R.K. Joint Communiqué*, October, 12, 2000 <[www.state.gov/www/regions/eap/001012\\_usdprk\\_jointcom.html](http://www.state.gov/www/regions/eap/001012_usdprk_jointcom.html)>;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공동코뮤니케,” 로동신문, 2000년 10월 13일 북한은 2000년 10월 12일 발표한 북·미공동선언을 국제법적 효력을 가진 역사적 외교문건으로 평가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성의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조미관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원칙적 입장,” 로동신문, 2000년 11월 7일 참조.



부 개설, 한반도 긴장완화 등 양국간 현안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였다.<sup>13</sup>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은 이 회담에서 양국 관계개선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북한 미사일 문제에 관해 중대한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는 대가로 제3국에서 북한 인공위성을 대리 발사해 주고, 경제제재 완화 및 경제협력 지원 등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면 중·단거리 미사일 수출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한 것이다. 그 후 미국과 북한은 11월 1~3일 말레이시아 콰라룸푸르에서 제6차 미사일 회담을 개최하였다. 이 회담에서 양측은 장거리 미사일 대리 발사 및 중·단거리 미사일 수출 중단에 대한 보상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여 일부 진전을 이루었다.

미 국무부는 북·미 미사일회담 결과를 토대로 클린턴 대통령의 북한 방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협상안의 세부사항에 대해 견해차가 남고, 11월 7일 실시된 미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혼란을 겪게 되자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 여부에 대한 결정이 지연되었다. 공화당 후보 부시의 당선이 확정된 이후에도 클린턴 대통령은 방북 계획을 추진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임기 내에 미사일협상을 마무리 지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 퇴임 직전 대통령이 방북하는 것에 대해 미국 내 여론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자 클린턴은 결국 북한 방문 계획을 취소하였다.

---

<sup>13</sup> U.S. Department of State, *Secretary of State Madeleine K. Albright, Press Conference, October 24, 2000* <[secretary.state.gov/www/statements/2000/001024b.html](http://secretary.state.gov/www/statements/2000/001024b.html)>.



# III

## 부시 행정부 출범과 제2차 북핵 위기



## 1. 부시 행정부 초기 대북정책

2001년 1월 20일 부시 대통령과 체니(Richard Cheney) 부통령이 공식 취임하여 공화당 행정부가 출범하였다. 공화당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은 레이건(Ronald Reagan) 행정부 및 부시(George H. Bush) 행정부에서 일한 보수주의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파월(Colin Powell) 국무장관, 럼스펠드(Donald Rumsfeld) 국방장관, 라이스(Condoleezza Rice)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 등 핵심적인 외교·안보정책 담당자들 모두 공화당의 보수적인 철학 및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첨단 군사력을 갖추어야 하며, 대외정책은 힘을 통한 국익확보를 추구하는 현실주의의 접근법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4</sup>

부시 대통령과 체니 부통령도 이들과 보수주의적인 철학 및 현실주의적인 국제정치관을 함께하였다. 체니 부통령은 특히 ‘절대적인 도덕관에 입각하여 국제관계를 선과 악의 대결’로 보며 ‘힘과 공포 등의 강압적인 수단을 중요시하며 애국심과 군사주의적인 미덕’을 강조하는 신보수주의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이들을 부시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에 적극 참여 시켰다.<sup>15</sup> 국방

---

<sup>14</sup> Condoleezza Rice, “Promoting the National Interest,” *Foreign Policy* (January/February 2000), pp. 45~62; The Republican National Committee, *Republican Platform 2000: Renewing America’s Purpose, Together*, August 3, 2000.

<sup>15</sup> 신보수주의 사상은 레오 스트라우스(Leo Strauss)교수의 정치사상에 뿌리를 두고 발전하였다. 스트라우스주의자들 이념의 핵심적 문제의식은 현대의 자유주의와 대비되는 고대적 자유주의의 복원이다. 즉, 스트라우스를 추종하는 신보수주의자들은 인간의 이기심을 기초로 한 쾌락을 중시하는 현대 자유주의와 달리 ‘진정으로 덕성을 가진’ 인간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 고대적

정책위원회 의장 리처드 펄(Richard Perle), 국방부장관 윌포위츠(Paul Wolfowitz), 국무부 군축 및 안보담당 차관보 존 볼튼(John R. Bolton) 등은 부시 행정부 내의 대표적인 신보수주의자들이었다. 이들은 클린턴 대통령이 유화적인 외교·안보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미국의 힘과 영향력을 약화시켰다고 비난하며 민주당 행정부가 추진해 온 대외정책을 전면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부시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은 국방력 증진, 힘을 통한 국익확보, 미국식 국제주의 등 현실주의적인 정책을 강조하며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에 안보전략의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2001년 5월 1일, 미 국방대학교에서 행한 연설에서 지상·해상·우주배치 요격체제를 갖춘 3단계 다층방어체제로 구성된 MD체제 구축을 공식 천명하였다.<sup>16</sup> 당시 부시 대통령은 MD체제가 순수한 방어용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MD체제를 구축하고 핵·미사일 선제공격능력을 강화하면 미국은 세계 군사적 패권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게 된다. 부시 행정부는 실제로 MD체제 구축을 통하여 군사력의 절대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중국·러시아·프랑스 등 강대국들이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 도전

---

자유주의 이상에 따라 정치질서를 구축하기를 원한다. 따라서 '절대적 가치와 힘에 대한 동경,' '시민적 덕성과 종교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는 반면, 공리주의적인 도덕규범을 강조하는 현대 자유주의자 및 '신중'한 정책결정을 강조하는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가들에 대해서는 경멸감을 표시해 왔다. 안병진, "미국 신보수주의의 사상적 배경: 레오 스트라우스를 중심으로," 남궁곤 편, *네오콘 프로젝트: 미국 신보수주의의 이념과 실천* (서울: 사회평론, 2005), pp. 102~129 참조.

<sup>16</sup> The White House, *Remarks by the President to Students and Faculty at National Defense University*, May 1, 2001 <[www.whitehouse.gov/news/release/2001/05](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2001/05)>.

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려는 가능성을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였다.<sup>17</sup>

부시 행정부 출범 초기 미국은 일방주의적인 힘의 외교를 추구함으로써 중국·러시아·북한과의 갈등을 증폭시켰다. 러시아와 탄도탄요격미사일제한(ABM)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하며 러시아가 조약 개정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ABM조약의 일방적 탈퇴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가 아닌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일본과 공동으로 견제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북한에 대해서는 국제체제 밖에 존재하는 불량국가로 규정하고 힘에 의한 압박정책을 통해 순응시켰다는 강경입장을 표명해왔다.

### 가. 대북정책 기조

라이스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은 미국이 김정일의 비위를 맞춰 가면서 그가 생존을 위해 이익만을 추구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며,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과 목표에 김정일이 참여하도록 끌어 내기 위해서는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 내부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sup>18</sup>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은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협상방식에 강한 거부감을 표명하였다. 그는 제네바합의를 준수할 경우에도 경수로 지원 대신 화력·수력 발전소 등 전통적인 방식으로 북한에 대한 전력 지원사업을

---

<sup>17</sup> Jeremy Shapiro and Lynn E. Davis “The New National Security Strategy,” Lynn E. Davis and Jeremy Shapiro, ed., *The U.S. Army and the New National Security Strategy* (Santa Monica: RAND, 2003), p. 10.

<sup>18</sup> 조선일보, 2000년 8월 4일 참조.

추진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북한의 조건부 미사일 개발 포기설에 대해서는 미사일 기술을 얻으려는 목적이라고 일축하며 미사일 개발·수출 포기 대가로 한 현금보상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sup>19</sup> 럽스펠드 국방장관과 월포워츠 국방부 부장관 등 국방부 인사들은 북·미 관계개선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편, MD체제 구축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제시하였다.<sup>20</sup>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을 재검토 해 오던 미 국무부는 대북정책 6대 원칙을 한·미·일 정책공조, 한반도 긴장완화 지지, 북한정권에 대한 정확한 현실 인식, 대북정책 전반 재검토, 대북협상 검증 및 점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등으로 정리하였다.<sup>21</sup> 한편, 부시 대통령은 2001년 6월 6일 성명을 통해 공화당 행정부 출범 이후 4개월 동안 진행한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되었음을 선언하고 북한과 협의할 의제로 ① 북한의 핵활동과 관련된 제네바합의의 이행 개선, ②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검증 가능한 규제 및 수출 금지, ③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에 의한 위협 완화 등을 제시하였다. 그는 이어 “이런 논의를 포괄적 접근의 틀에서 추진하겠다”며 “북한이 이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제재를 완화할 것이며 기타 정치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sup>22</sup>

<sup>19</sup> 중앙일보, 2000년 8월 9일 참조.

<sup>20</sup> Paul D. Wolfowitz, *Prepared Testimony of Deputy Secretary of Defens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July 12, 2001 <[www.senate.gov/~armed\\_services/hearings/2001/c010712a.htm](http://www.senate.gov/~armed_services/hearings/2001/c010712a.htm)>.

<sup>21</sup> U.S. Department of State, Richard Boucher, Spokesman, *State Department Noon Briefing*, March 9, 2001 <[usinfo.state.gov](http://usinfo.state.gov)>.



부시 대통령이 선언한 ‘북한의 핵활동과 관련된 제네바합의의 이행 개선’이란 북핵문제의 투명성을 당장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네바합의를 수정·보완하겠다는 의미인 것이었다. 그리고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배치문제는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 협상의 제로서 제기하지 않았던 문제이다. 부시 행정부는 새로운 협상의 제를 제시함으로써 북·미협상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확립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부시 행정부가 호혜적인 원칙에 입각하여 성립된 제네바합의를 북한측의 일방적인 양보를 통해 재조정하려는 것으로 파악하여 강력히 반발하였다.

## 나. 북한의 반응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의 유형은 크게 배분적 협상(Distributive Bargaining)과 통합적 협상(Integrative Bargaining)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23</sup> 배분적 협상은 협상의 이익이 고정되어 있는 가치의 분배를 위해 서로 경쟁하는 협상을 의미한다.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의 성격을 갖고 있는 배분적 협상에서는 한쪽의 이득은 곧 상대방의 희생을 의미한다. 한편, 통합적 협상은 협상 당사자들이 서로 협조하여 협상이익 자체를 확대하고 양측의 이해관계를 통합한 합의를 도출해내는 협상을 의미한다. 윈-윈 게임(win-win game)의 성격을 가진 통합적 협상에서는 가치 창출과 자기 몫을 챙기기가 동시에 추구된다. 제네바합의에 나타난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협상전략은 협상

<sup>22</sup> The White House, *Statement by the President*, June 6, 2001.

<sup>23</sup> Roy J. Lewicki and Joseph A. Litterer, *Negotiation* (Illinois: IRWIN, 1985), pp. 75~128.

의 두 가지 기본유형 중에서 통합적 협상을 추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새로운 협상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시각에서 보면, 클린턴 행정부가 추진해 온 북·미간 통합적 협상을 제로섬 게임 성격의 배분적 협상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었다.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북한은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비난하였다. 부시 행정부에 대한 북한의 비난은 북한 지도부에 대한 부정적 언급, 미국의 군사적 전략 및 MD체제 구축,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강권과 전횡 등에 초점이 맞추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001년 1월 25일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이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독재자로 지칭한 사실을 거론하며 “상식밖의 망나니 언동”이라고 비난했다.<sup>24</sup> 대변인은 또 파월 장관의 발언에는 북·미관계를 적대관계로 고착시켜 어부지리를 얻어 보려는 군수산업체들을 비롯한 미국내 강경·보수세력의 불순한 저의가 깔려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또한 미국이 MD체제 구축 명분으로 북한 미사일 위협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해 불만을 표출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협상 자세에 대한 원칙적 비난과 더불어 대미관계 개선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5월 3일 방북중인 EU의장 요한 페르손 스웨덴 총리와 가진 북한-EU회담에서 미사일 발사유예가 2003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일 위원장이 2003년까지 미사일 실험발사 유예조치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미국과의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미국에도 약속을 지켜달라는

---

<sup>24</sup> 연합뉴스, 연합뉴스 북한·통일·재외동포, 2001.2.15p 북미 참조

의사를 표명한 것이었다.

북한은 또한 제네바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의무태만에 따른 전력손실 보상을 요구하였다. 원래 제네바합의에 의하면 경수로 건설은 1호기가 2002년, 2호기가 2003년에 준공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수로 건설이 지연되면서 1호기는 2008년, 2호기는 2009년 이후에나 준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북한은 미국에 대해 2003년부터 입게 되는 200만kw 전력손실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주장하였다.<sup>25</sup> 한편,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조기 핵사찰 수용을 촉구하였다. 미국의 조기 핵사찰 수용 요구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제네바합의의 이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제네바합의에 따르면 경수로가 거의 완공된 후 주요 부품을 인도할 때 핵사찰을 받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미국의 조기 핵사찰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노동신문 6월 4일자 논평을 통해 북·미 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sup>26</sup> 첫째,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미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북·미 대화는 그 누구의 선심에 의해 진행되는 것도 아니며 일방이 타방에게 베푸는 혜택도 아니다. 둘째, 자주성과 공정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동등한 지위에서 대화를 해야 한다. 대화에서 자주성과 공정성, 평등을 보장하는 것은 국제관례이다. 셋째, 대화에는 사심이 없어야 하며 전제조건을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 검증이나

<sup>25</sup> 북한은 2001년 5월 1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조·미 기본합의문에 따른 경수로 건설 지연에 대한 상보」를 발표하였다. 통일부 정보분석국, 주간 북한동향, 제539호 (2001. 5. 12-18), pp. 13~14 참조.

<sup>26</sup> “올바른 대화자세를 가져야 한다.” 노동신문, 2001년 6월 4일; 연합뉴스, 연합뉴스 북한·통일·재외동포, 2001년 6월 14일, pp. 북B1~B5 참조.

재래식 병력감축 등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서는 안된다. 넷째, 미국이 주장하는 상호주의는 제네바합의에 제시된 ‘동시 행동 조치’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이와 같이 북한은 대미협상 원칙을 분명히 표명하고, “우리는 미국에 대화를 절대로 구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북한은 2001년 6월 18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부시 대통령의 북·미대화 재개 선언에 대해 첫 공식 반응을 내놓았다. 미국이 의제로 제시한 핵·미사일·재래식군비 문제에 대해서 “일방적이고 전제조건적이며 의도에 있어서 적대적”이라고 평가하고, 미국은 북한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며 “협상을 통해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려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sup>27</sup> 또한 북·미관계에서 모든 현안의 발생근원은 북한에 위협이 되고 있는 미국의 적대시정책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이 제시한 의제대로 끌려가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 북한은 그 후에도 미국측의 회담의제 철회를 요구하며, 부시 행정부의 대북협상 자세가 클린턴 행정부 집권 마지막 시기에 취했던 수준에 이를 때에 가서야 북·미대화의 재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이 북한은 제네바합의와 북·미 공동코뮤니케의 토대 위에서 북·미대화를 재개하자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이 제네바합의의 기본정신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자 북·미간에는 협상에 대한 기본입장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부시 대통령의 대화 재개 선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실익을 확보하기 어렵

---

<sup>27</sup>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2001.6.18 발췌),” 연합뉴스, 2002 북한연감 (서울: 연합뉴스, 2001), p. 895.

다고 판단하고 북·미협상을 서두르기 보다는 중국·러시아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를 반대하는 전략적 제휴 강화에 역점을 두고 외교정책을 추진하였다<sup>28</sup> 이와 같이 북·미관계가 대화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교착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2001년 9월 11일 아랍 테러리스트들이 민간여객기 4대를 납치하여 뉴욕 세계무역센터 건물과 미 국방부 청사에 대한 동사다발 자살테러를 감행한 테러사건이 발생하였다. 다음 표는 9·11테러 사태를 전후하여 표명된 북·미 양측의 협상에 관한 기본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표 III-1> 미국과 북한의 협상 관련 기본입장

	미국	북한
상대방 협상태도 인식	북한의 협상 의지에 대한 의구심	무장해제 시키려는 적대적 태도
협상 출발점	원점에서 다시 출발	클린턴 행정부와 합의사항 준수
협상원칙	투명성, 검증 가능성, 상호주의	동등한 지위에서 대화, 상호주의는 '동시 행동 조치'를 의미
협상방식	실무자급 개별협상 결과에 따라 접촉 수준 상승	고위급 회담을 통한 포괄적 협상
협상 의제	핵·미사일·재래식 군비 문제	경수로 건설지연에 따른 전력 손실 문제 우선 협상
제네바 합의	과거 핵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기 핵사찰	제네바합의 일정에 따른 핵사찰
미사일 협상	미사일 개발 및 수출 금지	미사일 실험발사 유예, 수출은 보상에 따라 금지
재래식 군비	한국과 협의하여 대처	재래식 무기감축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연계 추진
테러 지원국 해제 문제	일본 오토호 납치범 추방	일본 적군파는 정치적 망명객
테러사태	국제테러조직에 대한 정보 제공	원칙적인 반테러 선언
MD 문제	미사일방어체제 구축 강행	중국·러시아와 반MD연대 추진
4자회담	언급하지 않음	4자회담 언급하지 않음

<sup>28</sup>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1.7.26~8.15 러시아를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8개항의 모스크바 선언을 발표하였다. 모스크바 선언 2항은 ABM협정 준수를 요구하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였다.

북한은 테러 발생 직후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행위는 지극히 유감스럽고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테러에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리형철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10월 5일 유엔총회에서 유엔 회원국으로서 온갖 형태의 테러와 그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반대한다는 성명을 공식 발표하였다. 그러나 테러참사 이후 미국은 북한의 테러반대 성명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단순한 성명발표를 넘어서 국제테러조직에 대한 정보 제공, 일본 요도호 납치범 추방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며 북한이 반테러 전쟁에 적극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언급하였다.<sup>29</sup> 그 후 미국의 대북 정책은 테러와의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더욱 강경해 졌다.

## 2. 테러와의 전쟁과 대북정책 변화

부시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은 보수적인 정책성향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정책 추진과정에서 보수온건파와 보수강경파로 나뉘어 대립되는 경향을 보였다. 린스펠드와 월포위츠를 중심으로 한 국방부 인사들은 다자간 협력의 효용성을 무시하며 군사력을 앞세운 대외 강경정책을 선호하였다. 파월 국무장관을 중심으로 한 국무부 인사들도 외교정책이 군사력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지만, 군사력을 신중하게 사용할 것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미국의 대외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주장하였다.<sup>30</sup> 라이스 안보담당 보좌관은 양측의 대립되는 견해 사이

<sup>29</sup> 한겨레신문, 2001년 10월 24일 참조.

<sup>30</sup> Bruce W. Jentleson, *American Foreign Policy: The Bush Administration and the Dynamics of Choice*(Special Update) (New York: W.W. Norton & Company, 2002), p. 3.

에 중도적인 성향을 보였다. 그러나 9·11테러 이후 부시 대통령이 군사력을 이용하여 자유민주주의의 세계질서를 구축한다는 신보수주의자들의 논리를 채택하여 테러와의 전쟁을 정당화하고 공세적인 안보전략을 추진하자 미국의 대외정책 전반에 걸쳐 보수 강경파들의 입지가 강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대북정책에 관해서도 보수 강경파들의 발언권이 강화되었고 상대적으로 국무부 중심의 대북 협상파들의 입지가 약화되었다.

2001년 10월 7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 후 테러와의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자 미 국무부도 보다 강경한 대북 성명을 발표하였다. 리커(Philip T. Reeker) 국무부 부대변인은 2001년 11월 29일 외신기자들을 위한 브리핑에서 IAEA가 다른 나라에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검증절차에 3년 이상 걸린다고 밝히고, KEDO에 의해 북한에 건설 중인 경수로의 핵심부품 공급시기와 일정을 맞추어 핵사찰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당장 IAEA의 핵사찰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31</sup> 그 후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사찰을 수용하지 않으면 경수로 건설사업이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대북압박을 강화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2002년 1월 29일 연두 국정연설에서 전 세계 테러조직 소탕과 대량살상무기 개발국가들로부터의 위협 방지를 테러와의 전쟁의 2대 목표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북한·이란·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이들 국가들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경고하였다.<sup>32</sup>

<sup>31</sup> 조선일보, 2001년 12월 1일 참조.

<sup>32</sup> The White House, *President Delivers State of the Union Address*, January 29, 2002.

부시 대통령의 연두 국정연설 이후 럼스펠드 국방장관과 라이스 안보담당 보좌관은 북한을 미사일 장사꾼이라고 비난하며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을 지지하였다. 테넷(George J. Tenet) CIA 국장은 2월 6일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을 악의 축의 일원으로 규정한 근거는 탄도미사일 위협이라고 단정하고, 미국은 2015년경 북한·이란·이라크 등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sup>33</sup> 아울러 북한이 탄도미사일 완제품은 물론 원자재·부품·전문기술 등을 시리아·이란·이집트·리비아 등에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퍼월 국무장관은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이 IAEA의 핵사찰을 수용해야 할 시점이 됐는데도 북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경수로 건설사업이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에 대해 북한은 이를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간주한다고 반발하며 타격의 선택권은 미국만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하였다.<sup>34</sup> 그리고 부시 대통령이 2002년 2월 20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부시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정권을 주민들의 굶주림을 방치하는 정권, 투명하지 않고 외부와 단절된 정권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더욱 격렬히 반발하였다. 북한은 2002년 2월 22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부시가 우리를 악의 축이라고 망발한 것은 그 어떤 무기 문제나 테러와의 연관성 문제가 아니라 본질상 우리 최고수뇌부와 우리 제도에

<sup>33</sup> George J. Tenet, *Worldwide Threat-Converging Dangers in a Post 9/11 World*, Senate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February 6, 2002 <[www.cia.gov/cia/public\\_affairs/speeches/dci\\_speech\\_02062002.html](http://www.cia.gov/cia/public_affairs/speeches/dci_speech_02062002.html)>.

<sup>34</sup> “미국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예리하게 주시할 것이다(외무성 대변인 성명),” 로동신문, 2002년 2월 1일 참조.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에서 나온 것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하며 “우리 인민이 선택한 제도를 힘으로 변경시켜 보려는 부시 패거리와는 상종할 생각이 없다”고 선언하였다.<sup>35</sup> 이와 같이 미국의 대북 강경책이 단순히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 전략이 아니라 북한 정권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에서 기인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북한은 “우리는 언제든지 한번은 미국과 싸워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다”며 군사력 증강을 강조하였다.<sup>36</sup>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으로 미국의 대화의지에 대한 북한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언론이 북한 등 7개국을 핵공격이 가능한 대상으로 상정한 미 국방부의 핵태세검토(Nuclear Posture Review: NPR) 비밀 보고서의 일부를 공개하였다.<sup>37</sup> 이 보고서는 비핵공격으로 파괴할 수 없는 목표물, 핵과 생화학무기 공격시 보복, 불시의 군사적 사태 등의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구체적으로 북한의 남한 공격, 중국의 대만 공격, 이라크의 이스라엘 및 주변국 공격 등을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는 사례로 지적하였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언론에 공개된 직후 즉각 이 보고서가 핵공격 목표선정이나 계획에 관한 작전상의 지침을 담고 있지 않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핵공격 계획이 사실로 입증되는 경우 1993년의 북·미 공동성명과 1994년의 제네바 합의를 전면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sup>35</sup> 조선일보, 2002년 2월 23일 참조.

<sup>36</sup> “악의 제국의 강도적론리,” 로동신문, 2002년 2월 23일 참조.

<sup>37</sup> “Pentagon’s new nuclear targets in terror age,” *The New York Times*, March 10, 2002; U.S. Department of Defense, *Nuclear Posture Review[Excerpt s]*, January 8, 2002 <[www.globalsecurity.org/wmd/library/policy/dod/npr.htm](http://www.globalsecurity.org/wmd/library/policy/dod/npr.htm)>.

2002년 9월 부시 행정부가 새로 발간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는 테러리스트와 독재정권과 싸움으로써 평화를 지키고, 강대국  
 과 우의를 증진하여 평화를 유지하며, 전세계 국가에 자유와 개  
 방을 장려하여 평화를 확대하겠다고 천명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  
 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제공격을 정당화하였다.<sup>38</sup>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과거 냉전시기에 채택했던 적의 군사  
 적 도발에 대한 대량보복의 위협에 기초한 억지(deterrence) 개념  
 은 방어해야 할 국민도, 국가도 없는 테러조직에게는 아무런 경  
 고 의미도 갖지 못하며, 불량국가가 대량살상무기를 테러조직에  
 게 비밀리에 제공할 경우 봉쇄(containment) 역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테러와의 전쟁에서는 적이 도발하기  
 에 앞서 선제공격으로 테러 거점을 타격하고 테러조직의 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시 행정부는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불량국가에 대해서는 선  
 제공격도 불사한다는 방침 하에, 불량국가의 독재정권 교체를 통  
 한 자유주의적 세계질서 구축을 미국 안보전략의 궁극적인 목표  
 로 제시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에 적합한 세  
 계질서를 구축하는 데 미국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한 윌슨  
 (Woodrow Wilson) 대통령과 같이 이상주의적인 대외정책 목표  
 를 설정하고 군사력을 이용하여 이를 실현하려고 하였다.<sup>39</sup> 인간

<sup>38</sup>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ptember 2002 <[www.whitehouse.gov/nsc/nss.html](http://www.whitehouse.gov/nsc/nss.html)>.

<sup>39</sup> 윌슨 대통령은 1918년 공개외교, 민족자결주의, 일반적 군축, 세력균형원칙 폐기 및 집단안보체제 구축 등을 주장하는 대외정책 14개 원칙을 발표함으로써 미국 외교정책의 이상주의적 전통을 수립하였다. Fraser Cameron, *US Foreign Policy after the Cold War: Global hegemon or reluctant sheriff?*

의 자유가 세계적으로 공인된 보편적 가치관이며 미국이 높은 도덕적 권위를 세계질서에 구현해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시 대통령은 힘(power)으로 도덕적 원칙(principle)을 실현하는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취하였다.<sup>40</sup> 그러나 독재정권 하에 있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호소하기 보다는 미군의 군사력을 이용한 정권교체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적인 세계질서를 구축하겠다는 공세적인 안보전략은 정당성의 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강압적인 안보전략은 미국의 대외정책 추진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 대북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의구심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협상에 역기능을 초래하였다.

### 3. 제2차 북한 핵위기 발생

북한은 제네바합의 이후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우선시하며 ‘남한 배제정책’을 추구하였다. 즉, 남한으로부터 식량지원을 받으면서도 도발적 행태를 보임으로써 남북관계를 경색시켰다. 19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대북 포용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자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 지도층의 인식도 점차 바뀌게 되었다. 남북관계가 정상화되지 못하면 미국·일본과의 관계도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 북한은 2000년 6월

---

(New York: Routledge, 2002), p. 6.

<sup>40</sup> John Lewis Gaddis, “A Grand Strategy of Transformation,” *Foreign Policy* (November/ December, 2002).

13~15일 남북정상회담에 임하게 되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해 전방위 외교를 전개하며 미국과 획기적인 관계개선을 모색하였다. 이와 함께 남북장관급회담, 국방장관회담 등을 개최하고 경의선 철도연결 및 남북경협 활성화에 합의하였다.<sup>41</sup>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후 북·미 대화가 중단되자 북·미관계와 연계하여 남북관계 개선속도를 조절하였다.

2001년 3월 8일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어떠한 환상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북한은 외세와의 공조가 아닌 민족끼리 공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미공조를 지속하는 남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그리고 3월 13~16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된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 경비정의 북방한계선 침범, 북한 상선 3척의 제주해협 무단 통과 등 도발적인 행태를 보였다.

남북한은 2001년 9월 15~18일 서울에서 제5차 장관급회담을 개최하고 이산가족방문단 교환(10. 16~18),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제6차 남북장관급 회담(10. 28~31) 등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9·11 테러사태 이후 강화된 남한의 비상경계 태세를 문제 삼아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유보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비상경계로 서울과 남한이 불안하다는 이유를 들어 제6차 장관급회담을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주장하였다.<sup>42</sup> 제6차 남북장

<sup>41</sup> 통일부, 2001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01), pp. 67~103 참조.

<sup>42</sup> 한·미 연합사는 10월 2일 미 7함대 소속 항공모함 키티호크 전단이 출동하자

관급회담은 예정보다 연기되어 11월 9~13일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북측 대표들은 남한이 취한 비상경제 조치는 민족공조를 하자는 6·15 공동선언의 근본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sup>43</sup> 9·11 테러사태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식차이로 인해 논쟁을 겪게된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은 차기 회담 일정도 잡지 못한 채 결렬되었다.

2002년 1월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으로 북·미관계의 긴장이 고조되자,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는 2002년 4월 3~6일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미대화에 나설 것을 설득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임동원 특사와의 회담에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미국과 대화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상황인식에 동감하며 북·미대화에 나설 것을 시사하였다. 그 후 북한은 2002년 8월 12~14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과 8월 27~30일 개최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sup>44</sup> 북한은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한편, 일본과의 관계도 개선하였다. 일본 고이즈미(小泉純一郎) 총리가 9월 17일 평양을 방문하여 개최한 북·일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양국간 최대 현안인 일본인 납치 의혹문제를 시인함으로써 북·

---

전력공백을 메우기 위해 F-15 전투기를 남한내 공군기지에 추가 배치했다. 한겨레신문, 2001년 10월 25일 참조.

<sup>43</sup> “제6차 북남상급회담이 열렸다,” 노동신문, 2001년 11월 10일 참조.

<sup>44</sup>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경의선 철도는 2002년 말, 도로는 2003년 봄, 동해선 철도는 저진-온정리 사이 구간을 1년 내에 완공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개성공단 건설 착공 및 경제협력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4개 합의서를 빠른 시일 내에 발표시키기로 합의하였다. 통일부, 남북대화, 제 68호 (2001.5-2002.11), pp. 65~74 참조.

일관계 정상화를 향한 대타협의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IAEA의 핵안전협약 준수 및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조치 등도 약속하며 일본과 수교협상을 재개할 것을 희망하였다.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북·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자, 미국은 2002년 10월 3~5일 켈리 차관보를 특사로 평양에 파견하여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21개월 만에 첫 번째 공식적인 북·미 대화를 가졌다. 켈리 특사는 방북시 북한측에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재래식 군사력 등 미국의 ‘안보상 우려사항’과 함께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였다. 켈리 특사는 또한 북한이 우라늄 농축방식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핵개발 계획을 폐기해야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sup>45</sup> 이에 대해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였다.<sup>46</sup> 그리고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북한 체제안전을 보장해주면 농축 우라늄을 통한 핵개발 계획을 포함한 미국의 ‘안보상 우려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안보현안 문제들을 북·미 최고위급 회담을 통해 논의하자고 요구하였다.

켈리 특사의 방북 이후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0월 25일 담화

---

<sup>45</sup> 미국 정보기관은 북한이 파키스탄으로부터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가스원심분리기를 구입하여 자강도 희천시 하갑, 평양 인근의 평성과학기술단지내 국가과학원, 양강도 김형직군 영저동 등의 소규모 지하시설에서 우라늄 농축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북한이 1천여 대의 원심분리기를 이용해 핵폭탄 2개를 만들 수 있는 30kg 정도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중앙일보, 2002년 10월 25일 참조.

<sup>46</sup> 미 국무부 대변인은 10월 16일 켈리 특사 방북시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인했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농축 우라늄 핵개발 계획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U.S. Department of State, Richard Boucher, Spokesman,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Press statement. October 16, 2002 <[www.state.gov/r/pa/prs/ps/2002/14432.htm](http://www.state.gov/r/pa/prs/ps/2002/14432.htm)>.

를 통해 북·미 현안문제의 해결방식의 기준점은 북한의 자주권과 생존권 위협제거라고 밝히며 “미국이 첫째로 우리의 자주권을 인정하고, 둘째로 불가침을 약속하며, 셋째로 우리의 경제발전에 장애를 조성하지 않는 조건에서” 핵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sup>47</sup> 아울러 북한의 자주권과 생존권 위협의 제거가 모든 문제 해결방식의 기준점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함으로써 제네바합의, NPT, IAEA 안전협정,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폐기하는 것은 제네바합의에 따른 당연한 의무이며 새로운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뉴욕에서 11월 14일 개최된 KEDO 집행이사회는 12월분 대북 중유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한 반발로 북한은 12월 12일 제네바합의에 따라 연간 50만t 중유 제공을 전제로 하여 취했던 핵 동결을 해제하고 전력생산에 필요한 핵 시설들의 가동과 건설을 재개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sup>48</sup> 그 후 북한은 영변의 5MW급 원자로, 8,000여 개의 폐연료봉저장시설, 방사화학 실험실, 연료봉 제조시설에 설치된 봉인을 제거하고 감시카메라의 작동을 중단시켰다. 그리고 2003년 1월 10일 NPT 탈퇴 의사를 표명하고, 2월부터 5MW 원자로를 재가동하였다.<sup>49</sup>

<sup>47</sup> 연합뉴스, 연합뉴스 북한·통일·재외동포 (2010.8), pp. 북시~북시II 참조.

<sup>48</sup> 통일부 정보분석국, 주간 북한동향, 제621호 (2002.12.6-12), pp. 3~4 참조.

<sup>49</sup> CIA, *Unclassified Report to Congress on the Acquisition of Technology Relating to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Advanced Conventional Munitions*, 1 January Through 30 June, 2003 <[www.cia.gov/cia/reports/721reports/jan\\_jun2003.htm](http://www.cia.gov/cia/reports/721reports/jan_jun2003.htm)>.

이와 같은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해 미국의 북핵문제 전문가들은 폐연료봉 8,000여 개를 재처리할 경우 핵무기 5개 정도 만들 수 있는 25~30kg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으며, 5MW 원자로를 6~12개월 가동할 경우 핵무기 1개 제조에 충분한 6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sup>50</sup>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지 않으면 2004년 이후에는 플루토늄 핵폭탄과 더불어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생산도 가능해져 매년 2개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sup>51</sup> 그러나 현재 북한의 핵기술 수준은 핵개발 초기단계로서 핵장치의 정밀·소형화 능력은 의문시되며, 운반수단을 제조했다 하더라도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핵탄두 소형화 여부는 불확실한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

<sup>50</sup> CIA는 북한이 제네바합의 이후 공사를 중단한 영변 50MW 원자로와 태천 200MW 원자로를 건설하여 가동할 경우 매년 275kg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원자로는 건설에 착수하여도 단기간에 완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Sharon A. Squassoni,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How Soon an Arsenal?* CRS Report for Congress, Updated July 29, 2003 <[fpc.state.gov/documents/organization/24042.pdf](http://fpc.state.gov/documents/organization/24042.pdf)>.

<sup>51</sup> Larry A. Nicksch,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CRS Issue Brief for Congress, Updated (August 27, 2003), p. 1 <[fpc.state.gov/documents/organization/24045.pdf](http://fpc.state.gov/documents/organization/24045.pdf)>.



# IV

##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과 6자회담



북한이 핵개발을 시인한 이후 부시 행정부 내에서 대북정책에 관해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하였다. 파월 국무장관을 중심으로 한 국무부 인사들은 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협상을 지속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럽스펠드 국방장관, 체니 부통령, 볼튼 국무부 군비통제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들은 북한과 협상을 통한 핵문제 해결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이 부시 행정부 내부에서 대북정책을 둘러싼 견해 차이가 표출되자 테러와의 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대외정책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신보수주의자들은 핵협상에 기만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김정일 정권을 제거하고 보다 개혁지향적인 유희적인 정권을 수립하여야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대북 강경파의 입지를 강화시켜 주었다.

신보수주의자들은 북한에 김정일 체제가 유지되는 한 협상을 통한 핵문제 해결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sup>52</sup> 이들은 특히 핵사찰의 어려움을 강조하였다. 북한이 핵개발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IAEA 사찰관에게 핵개발 의혹이 있는 지점을 언제든지 불시에 사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북한의 핵공학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중립국에 불러내어 신변의 안전이 보장된 상황에서 북한 핵개발 실태에 관한 검증을 해야 하는데 북한은 이와 같은 엄격한 검증절차에 대해 합의를 할 것 같지 않다는 불신을 표명하였다.

체니 부통령, 럽스펠드 국방장관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

<sup>52</sup> Nicholas Eberstadt, *Diplomatic Fantasyland: The Illusion of a Negotiated Solution to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www.nautilus.org/fora/security/0342\\_Eberstadt.html](http://www.nautilus.org/fora/security/0342_Eberstadt.html)>; Henry S. Rowen, "Kim Jong Il Must Go," *Policy Review*, No. 121, October & November 2003, pp. 3~16.

는 신보수주의자 리처드 펄은 북한 정권교체를 위해 먼저 북한에 대해 포괄적인 공중· 해상 봉쇄조치를 취한 이후, 한반도에 지상 병력을 재배치하고,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을 가한다는 3단계 방안을 제안하였다.<sup>53</sup> 그는 미국이 북한 핵시설을 폭격하는 단호한 방침을 정하게 되면 중국도 김정일 정권을 제거하고 중국 측에 순종하는 새로운 정권 수립에 협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이 한반도에 전면전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보수주의자들은 북한 핵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보다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함으로써 북한 정권교체를 추진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들은 중국이 탈북자들을 수용하는 태세를 보이고 남한이 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면 대규모 탈북자들이 발생하여 북한도 통일 이전 동독처럼 체제붕괴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주장하였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개한 직후 부시 대통령도 북한을 외교적·경제적으로 고립시키고 김정일 정권을 교체하여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장하는 신보수주의자들의 논리에 동조하는 경향을 보였다.<sup>54</sup>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북 봉쇄정책은 한국과 일본·중국·러시아 등의 지지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미국은 특히 북핵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할 경우 중국·러시아가 대북 경제제재에 반대하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더불어 당시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반도에서의 사태악화

<sup>53</sup> Richard Perle and David Frum, *An End to Evil: How to Win the War on Terror* (New York: Random House, 2003), pp. 103~104.

<sup>54</sup> Larry A. Niksch,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CRS Issue Brief for Congress, Updated (August 27, 2003), p. 3.

는 미국의 대중동정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을 우려하게 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현실적인 제한 요소들을 고려하게 된 부시 대통령은 일단 국무부측이 주장하는 다자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2003년 1월 14일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면 에너지와 식량을 북한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재강조하며, 북핵문제를 북·미 양자간 협상이 아니라 중국·러시아·일본·한국 등을 활용한 다자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sup>55</sup> 그 후 파월 국무장관은 한국·중국·일본 등을 방문하여 다자협상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였다.

북한의 핵폐기는 제네바합의에 따른 당연한 의무이며 새로운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 온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먼저 핵폐기를 선언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미 양자협상을 재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국은 또한 북한을 다자협상 틀에 묶어 더 이상 핵 카드를 이용한 벼랑끝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핵 문제 해결 이후 보상을 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관련국에 분산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다자협상을 통해서도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국·러시아도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거부할 명분이 없게 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003년 3월 19일 미국은 이라크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라크와 전쟁기간에도 미국은 중국의 중재를 통해 북한과 대화를

---

<sup>55</sup> The White House, *President Bush Discusses Iraq*, January 14, 2003 <[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3/01/20030114-2.html](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3/01/20030114-2.html)>.

모색하였다. 그 결과 4월 23~25일 중국 베이징에서 미국·북한·중국 3자회담이 개최되었다. 미국은 북한이 먼저 핵개발을 포기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북·미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하여 미사일, 재래식 군사력 등 여타 북한관련 주요 사안 해결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설명하였다.<sup>56</sup> 북한은 핵폐기와 동시에 북한의 안보우려 사항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동시 이행’ 원칙에 입각한 문제해결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3자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은 각기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함으로써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회담에서 이근 북한 외무성 국장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으며, 폐연료봉 8000여 개의 재처리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주장함으로써 오히려 미국의 대북 강경자세를 더욱 자극하였다.

## 1. 대북 압박정책

3자회담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폐막된 후 미국은 북한의 미약· 위조지폐· 대량살상무기 불법거래 봉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핵문제 논의, 탈북자 수용 입법화 등의 조치를 취하며 대북압박을 가시화했다.

부시 대통령은 2003년 5월 31일 불량국가들의 대량살상무기 거래를 차단시키기 위한 새로운 국제연대를 구축하기 위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을 제안하였다. 그 후 6월 12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미국·영국·스

<sup>56</sup> U.S. Department of State, Washington File, *Power Says Beijing Talks Show United Opposition to Nuclear Korea*, 25 April 2003 <[usembassy.state.gov/seoul/www41ai.html](http://usembassy.state.gov/seoul/www41ai.html)>.

페인 · 프랑스 · 독일 · 이탈리아 · 포르투갈 · 네덜란드 · 호주 · 폴란드 · 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가운데 PSI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담에서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이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맹국들은 각기 국내법을 다양하게 적용하여 영해 · 영공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선적하고 있는 배와 항공기를 정선시키거나 강제 착륙시켜 조사토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sup>57</sup> 그러나 PSI는 상설된 조직을 가진 국제기구가 아니다.

PSI는 원래 2002년 12월 예멘으로 향하는 북한 미사일 수출 선박을 나포하였다가 풀어 준 경험에 비추어 발전된 구상이다.<sup>58</sup> 당시 미국은 북한 화물선 소산호가 15기의 스커드 미사일을 선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을 나포하는 것은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에 국제법에 허용하지 않는 조치를 강제하기 보다는 각국이 각자 국내법에 기초하여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저지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미국은 이와 같이 PSI를 통한 공동훈련을 실시하는 동시에 일본 · 호주와 별개의 3자회담을 개최하여 북한의 불법적인 마약 · 위조지폐 · 미사일 등의 거래를 중단시키기 위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을 검색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미 상원은 2003년 7월 9일 탈북자들의 미국 입국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의 일환으로 북한난민구호법 수정법안을 통과

<sup>57</sup> 그 후 Brisbane, Paris, London, Washington 등에서 연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대량살상무기 운송을 금지시키는 원칙을 발표하였다. *U.S. Department of State, U.S. to Host 5th Meeting o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2 December 2003* <usinfo.state.gov/topical/pol/arms/03120201.htm>.

<sup>58</sup> Rebecca Weiner,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to Stem Flow of WMD Materiel, July 16, 2003* <cns.miis.edu/pubs/week/030716.htm>.

시켰다. 이와 함께 부시 행정부도 대북압박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탈북자를 수용하는 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sup>59</sup> 그 후 미국 상·하원은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정부기구(NGO)를 지원하고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 및 난민 신청자격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북한 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의 법제정을 추진하여 결국 1년 후 2004년 10월 이에 대한 입법절차를 완료하였다.

한편, 2003년 7월 21일자 U.S. News & World Report는 미국 방부가 럽스펠드 장관의 지시에 따라 북한 정권의 붕괴를 유도하기 위한 작전계획(Operations Plan) 5030 초안을 수립했다는 기사를 발표하였다.<sup>60</sup> ‘작전계획 5030’은 북한 지역에 대한 근접 정찰 비행, 공세적인 군사훈련 등을 통해 북한 군부를 긴장시키고 혼란에 빠지게 함으로써 북한군의 부족한 군수물자를 고갈시킨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은 군사적 압박이 강화되면 미국과 승산 없는 대결을 지속하고 있는 김정일 정권에 대한 군부의 맹목적인 충성심이 와해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많은 현실적인 제약요인들을 고려하여 이 계획에 대한 최종적인 승인을 보류하였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지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제재를 감행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중동지역에 미군 병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 있어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전략적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sup>61</sup> 또한

---

<sup>59</sup> Glenn Kessler, “White House Mulls Plan to Admit North Koreans,” *The Washington Post*, July 16, 2003.

<sup>60</sup> Bruce B. Auster and Kevin Whitelaw, “Upping the Ante for Kim Jong Il,” *U.S. News & World Report*, July 21, 2003.



북한에 대한 공격을 개시할 경우 이라크의 경우와 달리 북한지역을 평정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대규모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미국의 선택범위를 제한하였다.

미국은 대북 군사제재가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입법조치 및 PSI 공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현재 PSI에는 초기에 참여한 11개국 외에 캐나다· 싱가포르· 노르웨이· 러시아 등 5개국이 참가하여 대량살상무기 이동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량살상무기를 선적하고 있는 배와 항공기를 정선시키거나 강제 착륙시켜 조사하는 공동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03년 10월에는 농축우라늄 원심분리기를 신고 리비아로 향하는 선박을 정선시켜 조사함으로써 리비아의 카다피 대통령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할 것을 결심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하였다.<sup>62</sup> 리비아의 사례에 고무되어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PSI 합동 훈련을 강화해 오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공식적인 봉쇄조치(blockade)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되는 PSI의 효율성은 미국이 북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거래 실태에 관해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느냐에 달려 있다.

---

<sup>61</sup> 미국은 2003년 말 현재 이라크에 14만 명, 쿠웨이트와 아프가니스탄에 각각 2만 명 정도의 미군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

<sup>62</sup> Jofi Joseph,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Can Interdiction Stop Proliferation?," *Arms Control Today*, June 2004, pp. 6~13.

## 2. 1~3차 6자회담

미 국무부는 2003년 7월 18~19일 미국을 방문한 중국 외교부 다이빙궈(戴秉國) 부부장을 통해 다자회담 구도 속에서 북·미간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 및 북한이 핵포기 의사를 밝히면 북한 체제안전보장을 공식화시킬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중국의 중재를 통해 북한이 다자회담을 수용할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2003년 8월 27~29일 베이징에서 남북한·미국·일본·중국·러시아가 참여하여 제1차 6자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핵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NPT 복귀를 강조하며 핵폐기의 진전에 따라 식량 및 에너지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가침 협정 체결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북한의 안보 우려에 대한 문서 보장 방법 등에 대해 서로 협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한편, 북한은 북·미간 불가침 조약 체결을 강조하고, 북한의 핵폐기와 북·미 관계정상화 과정은 상호 동시행동의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핵억제력 즉,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표명하였다.

부시 행정부 내에서 대북 강경책을 주장하는 인사들은 북한이 대화를 통해 쉽게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6자회담이 실패할 경우 대북 압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더 강력한 명분을 갖게 된다고 생각하였다.<sup>63</sup> 이들이 예상했던 바와 같이 6자회담은 아

---

<sup>63</sup> Steven R. Weisman, "North Korea seen as ready to agree to wider

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끝났지만 이번 회담을 통하여 미국은 대북 압박을 강화할 수 있는 국제적 지지기반을 확대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북핵 문제 해결에 완고한 태도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지적한 중국 대표의 비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제1차 6자회담 이후 미국은 북한의 핵폐기를 선행조건으로 엄격히 요구하는 기존의 입장을 완화하여 북한의 핵폐기 과정과 미국의 인센티브 제공 과정을 병행 실시해 나갈 수 있다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sup>64</sup>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003년 10월 20일 개별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이 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을 침략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핵폐기에 진전을 보인다는 것을 전제로 다자틀 속에서 북한의 체제안전을 문서로 보장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sup>65</sup>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체제안전 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는 태도를 공식적으로 천명함으로써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미국은 북한의 안전보장 방안으로 미국 대통령이 불가침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일본·중국·러시아가 이에 서명하는 방식 또는 북한을 포함한 전 참가국들이 공식적으로 서명하는 복합협정 방식 등을 고려하고 있다.<sup>66</sup>

---

meetings,” *The New York Times*, August 1, 2003.

<sup>64</sup> David E. Sanger, “U.S said to shift approach in talks with North Korea,” *The New York Times*, September 5, 2003.

<sup>65</sup> 청와대, 한·미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 2003. 10. 20 <[www.cwdgokr/war\\_p/kr/diplomacy/05/calendar](http://www.cwdgokr/war_p/kr/diplomacy/05/calendar)>.

<sup>66</sup> Mike Allen and Glenn Kessler, “Bush Says Pact With N. Korea Possible: Security Guarantee Linked to Steps on Nuclear Programs,” *The*

2004년 2월 25~28일 2차 6자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이 파키스탄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핵폐기(CVID)를 실시할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미국은 2차 회담에서 한국이 제안한 대북 에너지 지원계획에 대해 동참하지는 않겠지만, 이해하며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북한의 실질적인 핵개발 계획의 포기 없이는 지원도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다소 완화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 계획 자체를 부인하고, 군사용 핵만 동결하고 평화적 목적의 핵개발을 지속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아울러 핵 동결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였다. 한편, 한국은 2차 회담에서 북·미간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북한의 핵 폐기를 전제로 한 핵 동결에 상응해 에너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보다 신축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3차 6자회담을 앞두고 부시 행정부 고위관리들은 한국측이 제안한 3단계 북핵문제 해결방안을 합리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발언하며 북핵 문제를 유엔으로 가져갈 계획은 없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2004년 6월 23~26일 개최된 제3차 6자회담에서 미국은 보다 융통성 있는 2단계 해법을 제시하였다. 먼저 초기 준비단계 3개월 동안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한 완전한 핵폐기 원칙에 합의한 뒤 이를 전제로 핵개발을 동결하면, 한국·중국·일본·러시아가 매달 수만 톤의 중유를 공급하고, 미국은 북한을 침공하거나 김정일 정권을 전복시키지 않겠다는 임시 안전보장안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 후 북한이 모든

---

*Washington Post*, October 21, 2003.

핵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면 미국은 북한체제의 항구적인 안정정보장을 제공하고, 북·미 국교정상화 및 경제지원을 확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sup>67</sup> 그러나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며, ‘핵동결 대 보상방안’을 강조하였다. 즉, 미국이 200만kw 상당의 에너지 지원에 참여하고, 북한을 미 국무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며, 경제제재를 해제 하는 등의 보상방안을 수용하면 핵무기 관련 모든 시설물과 재처리 결과물을 포함한 핵동결에 들어갈 것이며, 여건이 되면 폐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찰방식은 6자회담 참가국의 합의에 의해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3차 6자회담 이후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완전히 포기한 리비아의 사례를 따라 완전한 핵폐기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자 4차 6자회담 개최를 거부하며 대선결과를 관망하는 자세를 보였다.

### 3. 대북정책에 관한 민주당의 비판

미국내 민주당 계열의 자유주의적인 지식인, 진보적 인사, 한국 지식인들은 부시행정부의 일방주의 외교정책과 선제공격을 정당화하는 안보정책 등을 비판해 왔다. 부시 행정부의 안보전략은 선제공격을 가하여 독재자의 정권교체를 추구하게 되면 민주국

---

<sup>67</sup> 외교통상부, 제3차 6자회담 결과 , 2004. 6. 28 <[www.mofat.go.kr/mofat/mk\\_a008/mk\\_b083/mk\\_c163/1161198\\_52](http://www.mofat.go.kr/mofat/mk_a008/mk_b083/mk_c163/1161198_52)>.

가들의 국제적인 호응과 더불어 독재자에게 억압받아 온 주민들의 지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계 지식인들은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대한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미국 내에서도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관련 정보를 과장했다는 비판이 확산되었다.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비판적인 지식인들은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공언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무력제재를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기구의 사찰도 받고 대량살상무기를 제조한다는 증거도 없는 이라크를 공격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주장도 제기하였다. 미국 내 일부 지식인들은 부시 행정부가 추구하는 세계전략은 자유주의적인 세계질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보다는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여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미국이 제국(empire)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고 비판하였다.<sup>68</sup>

미국의 대북정책에 관해서 이들은 부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불필요하게 자극적인 강경발언을 하며 선제공격을 위협함으로써 북한의 핵무기 보유 욕구를 강화시켰다고 비판하였다. 자유주의적인 지식인은 부시 행정부에 대해 북한이 수용 가능한 협상안을 제시하고 북·미간 양자회담을 추진하며, 한국의 지지를 확보할 것을 권유해 왔다.<sup>69</sup> 북한과의 대타협을 주장하는 인사들은 부시

<sup>68</sup> Edward Rhodes, "The Imperial Logic of Bush's Liberal Agenda," *Survival*, Vol. 45, No. 1, Spring 2003, pp. 131~154.

<sup>69</sup> Michael O'Hanlon and Mike Mochizuki,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New York: McGraw-Hill, 2003), pp. 92~93; Selig S. Harrison, *Korean Endgame: A Strategy for Reunification and U.S. Disengagemen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 Han S. Park and Kyung-Ae Park, "U.S. lacks options in crisis with Pyongyang," *Jane's*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악의적인 무시정책(hostile neglect)이 제2차 핵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미국이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며 체제안전 및 대규모 경제지원을 보장해주면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보다 발전된 대북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강행할 경우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자유주의적 지식인들과 진보적 지식인 사이에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오한론(O'Hanlon) 등 자유주의적 지식인들은 미국의 진실한 대북 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움직임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치루는 것이 미국 본토가 북한 핵위협에 놓이는 것보다 안전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이들은 북핵문제 해결의 최후의 수단으로서 무력사용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sup>70</sup> 한편, 진보주의적 지식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북한이 핵개발을 강행할 경우 어떠한 정책을 취할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 명백한 언급을 회피하였다.

---

*Intelligence Reviews*, April 2003, pp. 38~39.

<sup>70</sup> O'Hanlon et. al. op.cit., p. 20.

<표 IV-1> 공화당과 민주당의 선거쟁점 비교

항목	공 화 당	민 주 당
외교 안보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익 우선의 미국식 국제주의 추구</li> <li>-미국의 리더십 원칙 및 일방주의 외교노선 유지</li> <li>-테러리즘에 대한 선제공격</li> <li>-PSI 강력 추진</li> <li>-독재정권 교체를 통한 민주주의 정착</li> <li>-이라크 공격 정당성 주장, 미국 주도로 이라크 안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맹국과 협력증진 및 국제협약 준수</li> <li>-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도덕적 권위 재확립</li> <li>-국제협력 및 민간외교를 통한 테러리즘의 근원적 해결</li> <li>-초동단계 예방행동 강화</li> <li>-이라크 전쟁은 잘못된 정보에 입각한 실패작, 국제협력을 통한 안정화</li> </ul>
경제 사회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금 감소정책 영구화</li> <li>-해외진출기업 세제 간소화</li> <li>-의료서비스 민영화</li> <li>-낙태 원칙적 반대</li> <li>-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제한</li> <li>-동성결혼 금지</li> <li>-사형제도 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정적자 감소</li> <li>-중소기업 조세부담 완화</li> <li>-사회보장제도 확대</li> <li>-낙태의 자유 인정</li> <li>-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지시</li> <li>-동성연애자 차별 반대</li> <li>-사형제도 반대</li> </ul>
미군 군사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사력 첨단화 및 MD체제 구축을 위한 국방비 증액</li> <li>-미군 군사변환 가속화</li> <li>-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추진, 향후 10년간 6-7만명 귀환</li> <li>-주한미군 병력 단계적 감축, 대북 전쟁 억지력 유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사변환 등 군사력 첨단화</li> <li>-대테러전 특수부대 증강</li> <li>-미군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현역군인 증원</li> <li>-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신중, 조기 감축 부적절</li> <li>-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북한의 비판 우려</li> </ul>
대한반 도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클린턴 행정부의 유화적 대북정책 실패</li> <li>-완전한 북핵 폐기, 철저한 검증</li> <li>-6자회담을 고수, 외교와 압박 병행</li> <li>-북한은 국제체제 밖에 존재, 북핵 위기 고조시 무력사용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시 행정부 대북정책 실패, 북한 핵무기 4-7개 보유</li> <li>-완전한 북핵 폐기, 철저한 검증</li> <li>-6자회담과 북·미대화 병행</li> <li>-남북한 군축 및 평화체제 구축 등 포괄적 협상</li> <li>-북한과 핵폐기 협상 실패시 강압적 수단 사용</li> </ul>

자료: 2004 Republican National Convention, *A Safer World and a More Hopeful America* (2004 Republican Party Platform), August 2004; 2004 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 *Strong at Home, Respected in the World* (The Democratic Platform for America), July 2004.



2004년 초반부터 대통령 선거유세가 시작되자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존 케리 (John Kerry) 상원의원은 부시 행정부가 비확산 (non-proliferation) 관련 국제협약들을 무시하고 이라크 전쟁에 몰두함으로써 북한과 이란 등의 핵개발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켰다고 비판하였다.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다룰 아무런 계획도 갖고 있지 않은 데다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하지 않음으로써 중대한 실책을 범했다는 것이다.<sup>71</sup>

특히 부시 대통령 집권기간 동안 북한이 핵폭탄 6~9개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을 추가로 생산했다고 비난하였다. 케리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미 직접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북한 김정일에 대해 환상이 없으며 북한 핵문제에 대한 어떤 협상도 분명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북한측에 대해 완전한 핵폐기를 요구하는 기본입장에는 공화당과 차이가 없음을 보여 주었다.<sup>72</sup>

케리 후보는 부시 대통령이 향후 10여년 내에 유럽·아시아 주둔 미군 6~7만 명의 본토 귀환을 제안한데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성급한 감축은 미국과 지역 안보 증진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며, 미군의 안전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추진할 것을 주장하였다.<sup>73</sup> 아울러 '미래 한·미동

<sup>71</sup> John Kerry, "If I were President - Addressing the Democratic Deficit," *Foreign Policy* (March/April 2003).

<sup>72</sup> 2004 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 Committee, *Strong at Home, Respected in the World*, The Democratic Platform for America, July 2004 <<http://www.democrats.org>>.

<sup>73</sup> John Kerry, *Remarks at the Veterans of Foreign Wars Convention*, August

맹 정책구상'(FOTA) 회의에서 미국이 2005년 말까지 주한미군 병력 12,500명 감축 계획을 제시한 데 관해서, 북한이 진정한 핵 위협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북한측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미국 사회의 도덕적 가치관과 이라크 전쟁에 관한 정당성 논란으로 미국사회가 보수·진보층으로 분열된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실시된 2004년 11월 2일 대통령 선거에서 부시 대통령은 민주당의 케리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하였다.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의회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승리하였다. 상원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석 배분이 55석 대 44석, 하원에서는 232석 대 202석으로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였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의 승리도 부시 2기 행정부의 정치적 지지기반은 더욱 공고해졌다.

그러나 이라크 내부의 폭력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정보를 왜곡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이라크 주둔 미군의 포로학대 장면이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부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대외정책에 대한 국내외 비판이 점차 더욱 확대되었다.

---

18, 2004 <[www.cfr.org/campaign2004/print.php?id=7257&type=pub](http://www.cfr.org/campaign2004/print.php?id=7257&type=pub)>.

# V

## 부시 2기 행정부와 북한의 핵보유 선언



## 1.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부시 대통령은 재선이 확인된 이후 미국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전세계적으로 확산시키야 한다는 신념을 다시 강조하였다. 그리고 집권 2기에도 테러와의 전쟁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에 역점을 두고 외교·안보정책을 추진하며, 힘의 우위에 바탕을 둔 일방주의적 외교노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암시하였다.

한편, 부시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내각 개편을 추진하였다. 미국의 대외정책과 관련하여 보수 온건파로 알려진 파월 국무장관과 보수 강경파인 림스펠드 국방장관의 유임 여부가 크게 관심을 끌었다. 그런데 부시 대통령은 보수 온건파로 알려진 파월 국무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파월 국무장관 후임에는 라이스 안보담당 보좌관을 지명하였다. 새로운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으로는 신보수주의자 그룹에 속하는 해들리(Stephen Hadley) 안보담당 부보좌관을 임명하였다.

라이스 국무장관 지명자는 2005년 1월 18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며, 북한이 검증이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면 미국도 참여하는 다자 안전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sup>74</sup> 또한 북한 핵 문제가 외교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으며, 북한이 6자 회담에 돌아오리란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세계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확산해야 한다고 주장하

<sup>74</sup> Condoleezza Rice, *Opening Statement by Dr. Condoleezza Rice*, U.S.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January 18, 2005; 조선일보, 2005년 1월 20일 참조.

며 북한을 쿠바·미얀마·이란·벨로루시· 짐바브웨 등과 함께 ‘폭정의 전초기지’(outposts of tyranny)의 하나로 표현하여 북한 체제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부시 대통령은 2005년 1월 20일 취임연설에서 자유의 확산을 위한 전세계 민주주의의 성장은 결과적으로 미국에 대한 위협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유의 확산’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로서 천명하였다.<sup>75</sup> 그러나 미국의 정부 체제를 다른 나라에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2월 2일 국정연설에서도 자유의 확산을 2기 대외정책 기조로 재강조하였다. 그러나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아시아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북한이 핵 야망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간략히 언급하여 외교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였다.<sup>76</sup> 한편, 부시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서는 핵문제 이외에 테러지원국, 자유박탈국이라고 강력히 비난하였다. 아울러 이라크 전후처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정착 문제 등에 대한 외교정책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북핵문제 해결보다는 중동지역의 평화와 민주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부시 1기 행정부 초기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과 협상을 중시하는 국무부 온건파 인사들과 북한의 정권교체를 주장하는 보수 강경파 인사들과의 입장 차이로 인해 혼선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9·11 테러 이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를 중심으로 한 보수 강경파들이 국무부에 독자적인 재량권을 허용하지 않고 강한 통제력

---

<sup>75</sup> The White House, *President Sworn-In to Second Term*, January 20, 2005 <[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5/01/20050120-1.html](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5/01/20050120-1.html)>.

<sup>76</sup> The White House, *State of the Union Address*, February 2, 2005 <[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5/02/20050202-11.html](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5/02/20050202-11.html)>.

을 발휘하였다. 2기 행정부에서도 체니 부통령이 대북정책의 큰 틀에 관해서 여전히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체니 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원칙을 고수하며 여전히 대북 강경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 점령정책의 실패로 인해 신보수주의자들의 영향력이 축소되자 체니 부통령도 북핵문제로 인해 또 다른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대북 강경책을 강행함으로써 북핵문제를 악화시키기 보다는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주장하는 국무부 실무자들에게 일단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조세프 디트라니(Joseph R. DeTrani) 대북협상특사는 체니 부통령 그룹의 전적인 지원을 받으며 뉴욕에 있는 유엔주재 북한대사관과 접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77</sup>

보수 강경파들의 입지가 약화됨에 따라 2기 행정부에서는 부시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라이스를 중심으로 한 국무부가 대외정책 추진에 보다 많은 재량권을 발휘하게 되었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신보수주의자인 존 볼튼 군축 및 안보담당 차관보을 유엔대사로 발령하고 전문성을 갖춘 실용주의 인사를 대거 발탁했다.<sup>78</sup> 줄릭(Robert B. Zoelick) 부장관, 번스(R. Nicholas Burns) 정무차관 등 국제주의자들을 중심으로 국무부를 재편성하였다.

---

<sup>77</sup> 동아일보, 2005년 6월 28일 참조.

<sup>78</sup> 조세프(Robert Joseph)가 2005년 6월 1일 새로운 군축 및 안보담당 차관보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2005년 4월 제임스 켈리 동·아태 차관보를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Hill) 주한 미국대사로 바꾸었다. 동·아태 차관보에 임명된 힐은 부시 대통령과 라이스 국무장관의 신임을 바탕으로 부차관보급 이상의 정책라인을 실용주의 성향의 동아시아 전문가들로 교체하였다. 국무부 내의 이러한 인적 변화는 미국의 대북정책을 강경책 일변도에서 벗어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해법에 우선을 두는 쪽으로 변화시켰다.

## 2. 북한 핵보유 선언과 미국의 반응

### 가. 북한의 핵보유 선언

북한은 부시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미국이 제시한 협상의제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다. 9·11테러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이 강경해지면서 미국의 군사적 제재 가능성을 우려하였으나, 중동지역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을 결단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인지하면서 다시 핵카드를 꺼내 들었다. 북한은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며 벼랑끝 외교를 재개하였으나 6자회담에서 미국측의 양보를 받아내지 못했다.

북한은 부시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 미국의 대북정책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을 보이지 않자, 2005년 2월 1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우리를 폭압정권이라고 전면 부정해 나온 조건에서 미국과 회담할 명분조차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6자회담의 무기한 중단



을 선언하였다.<sup>79</sup>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 성명에서 2기 부시정권의 정책정립 과정을 인내성을 가지고 예리하게 지켜보았다고 밝히며, 부시 대통령의 취임연설과 연두교서 그리고 라이스 국무장관의 의회인준청문회발언 등은 미국이 북한과 공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6자회담 참가 명분이 마련되고 회담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인정될 때 까지 6자회담에 불참하며, 부시 행정부의 지속·강화되는 대북압살정책에 맞서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고를 늘이기 위한 대책을 취할 것”임을 공식 선언했다.

북한의 6자회담 불참 및 핵보유 선언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깊은 불신에 기인한 것이다.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대북 적대시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6자회담에 나가봤자 아무런 실리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6자회담 참가국들의 성향 및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의 현실적 한계에 대한 치밀한 계산 하에 핵보유 선언이라는 공세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부시 정부에 대해 보다 유연한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유해오고 있는 한국과 중국이 핵보유 선언을 하여도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에 즉각 협력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둘째, 부시 행정부가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를 중동지역의 안정 및 민주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대북 강경책을 한층 더 강화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특히 이라크 내부 사태가 계속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반도에서

<sup>79</sup> 통일부 정보분석국, 주간 북한동향, 제729호 (2005.24-217), pp. 3~5 참조.

또 다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 가능성에 대해 기대를 걸고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는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월 21일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의 회담에서 관련국들의 공동노력으로 6자회담의 조건이 성숙되면 회담장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sup>80</sup> 즉, 6자회담에 복귀할 명분이 마련되고 회담 결과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분위기가 조성되면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한편, 북한 외무성은 3월 31일 담화를 통해 북한의 핵보유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과 남한에 배치된 핵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 된 만큼 6자회담은 참가국들이 평등한 자세에서 문제를 푸는 균축회담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sup>81</sup>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 조건으로써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전환, 남한 내부의 핵무기 철수 및 남한 자체의 핵무장 요소 제거와 검증, 그리고 한반도 주변에서 미국의 핵전쟁 연습 중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6자회담의 전제조건으로서 균축회담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균축회담 제의를 통하여 6자회담이 북·미 양측의 동등한 회담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핵위협을 과장해서 발표하고 있다고 비판해 온 미국의 진보적인 학자 해리슨(Selig S. Harrison)은 2005년 4월 5~9일 평양을 방문한 후 북한이 6자회담에선 북핵 프로

<sup>80</sup> 중앙일보, 2005년 2월 23일 참조.

<sup>81</sup> 통일부 정보분석국, 주간 북한동향, 제735호 (2005.3.25-31), pp. 3~4 참조.

그럼의 현 수준 동결만 논의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완전한 핵폐기 문제는 북·미 외교관계가 정상화되기 이전에 협상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sup>82</sup> 한편, 친북인사로 알려진 재미동포 한호석은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하고 핵보유를 선언한 것은 부시 행정부를 북·미 정치회담으로 끌어내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그는 북한이 북·미 갈등관계를 핵문제를 둘러싼 제한적 대결이 아니라 전면적인 체제대결로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완전히 핵폐기 조건으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제시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하여 양국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핵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임을 강조하고 있다.<sup>83</sup> 여하튼 북한은 핵보유 선언을 통하여 부시 행정부에 대해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였다.

## 나. 미국의 반응

미국은 북한의 6자회담 불참 및 핵무기 보유선언에 대해 비교적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협상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한편, 북한의 회담복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2005년 2월 14일 워싱턴을 방문한 반기문 외무장관과 회담을 통해 6자회담 과정의 붕괴는 받아들일 수 없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준수되어야 하며, 북한의 핵확산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는 3대 원칙을 확인했다. 한·미 외무장관은 또한 6자회담 참가국간의 양자 및 다자간 외교노력을

<sup>82</sup> 한겨레신문, 2005년 4월 11일 참조.

<sup>83</sup> 한호석, 자주적 민주정부와 자주적 통일정부를 향하여 (코리아미디어, 2005), pp. 128~143 참조.

신속하게 전개하기로 합의하고, 특히 중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3월 18~21일 한·중·일 3국을 순방하였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3월 20일 한·미 외교장관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주권국가라는 사실을 지적했다.<sup>84</sup> 라이스 장관은 또한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며 북한은 핵폐기라는 전략적 선택을 통해 안전보장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다른 방안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하였다. 라이스 장관은 동북아 순방을 통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한·미·일 3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받았지만 대북 압박을 가중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끌어내지는 못했다.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4월 23~30일 한·중·일 3국을 연쇄 방문하며 현 상황에 대한 평가와 6자회담 재개에 관해 논의하였다. 그는 특히 중국측에 대해 대북 석유공급의 기술적 중단을 제의했으나 중국측은 송유관 손상 위험을 이유로 거부했다.<sup>85</sup> 이와 같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구체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영변 원자로 핵물질 재처리,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핵실험 가능성 등을 시사하며 벼랑끝 전술을 전개하자 미국과 일본 내에서는 전반적인 상황 인식이 비관적으로 바뀌며 북한 핵과 관련한 '6월 위기설'이 제기되었다.

---

<sup>84</sup> U.S. Department of State, *Remarks with South Korean Foreign Minister Ban Ki-Moon after Meeting*, March 20, 2005 <[www.state.gov/secretary/rm/2005/43665.htm](http://www.state.gov/secretary/rm/2005/43665.htm)>.

<sup>85</sup> 한국일보, 2005년 5월 9일 참조.

북한은 4월초 영변 5MW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고 폐연료봉을 재처리하여 플루토늄을 추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후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5월 11일 영변 5MW 원자로에서 8,000여 개의 폐연료봉을 모두 인출했다고 발표하였다.<sup>86</sup> 한편, 북한은 5월 1일 동해로 사정거리 1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여 주목을 끌었다. 또한 함경북도 길주에서 지하 터널을 건설하기 위해 갱도를 파고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진행함으로써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시키고 있다.<sup>87</sup> 북한은 이와 같이 핵무기 증대,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핵실험 가능성 등을 시사하며 미국의 협상자세 변화를 촉구하는 강온양면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벵라골 전술은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6자회담에 무조건 복귀하지 않으면 6월 이후에는 북핵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하여 대북 제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단호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라크 전후 처리에 고심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현실적인 제약 요인을 고려하여 북핵문제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되기를 원했다. 부시 대통령은 5월 31일 기자회견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미스터(Mr.) 김정일’로 호칭하는 등 유연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북측이 미국과의 회담에 임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였다.

<sup>86</sup> 통일부 정보분석국, 주간 북한동향, 제741호 (200556-12), pp 5~6 참조.

<sup>87</sup> David E. Sanger and William J. Broad, "Photos hint North Korea is Preparing nuclear test," *The New York Times*, May 6, 2005.

### 3. 한국의 중재 활동

한국 정부는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북핵불용,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대한민국의 적극적 역할 등 3대 원칙을 천명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sup>88</sup> 노무현 정부는 무엇보다도 북한 핵문제의 근원적·포괄적 해결을 추구하였다. 이를 위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행위에 반대하며, 북한이 핵, 미사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시, 해결단계에 맞추어 대규모 대북 경제협력을 단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6자회담이 개최된 이후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주도적인 자세로 구체적인 협상안을 마련하는 등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협상구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북한이 2005년 2월 10일 6자회담 무기한 불참성명을 발표하여 6자회담 재개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참여정부는 북한이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외교를 전개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워싱턴을 방문하여 부시 대통령과 2005년 6월 10일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재확인하였다.<sup>89</sup> 아울러 양국정상은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경우 다자 안전보장 및 에너지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며 궁극적으로 북·미관계가 보다 정상적인 관계로 발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일 정상회담, 국무총리의 중국방문, 중국 및 러시아와의

<sup>88</sup> 국가안전보장회의, 평화번영과 국가안보 (서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2004.3.1), pp. 32~34.

<sup>89</sup> 청와대, 「한·미 정상회담: 동맹 공고, 북핵 평화적 해결 공동목표」 <[www.president.go.kr/cwd/kr/archive\\_view.php?meta\\_id=di...](http://www.president.go.kr/cwd/kr/archive_view.php?meta_id=di...) 2005.6.13>.

외교장관회담 등을 통하여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주도하였다.

한편, 남북한은 2005년 5월 16~19일 개성에서 차관급회담을 개최하여 장관급회담의 재개와 6·15 평양행사에 정부 대표단 참석, 그리고 비료 20만 톤 지원에 합의함으로써 10개월 동안 중단된 남북관계를 복원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 후 6월 14~17일 평양에서 개최된 6·15 5주년 통일대축전 행사에 참여한 정동영 통일부장은 6월 17일 김정일 위원장과 면담하고 북핵문제 해결시,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우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의지가 확고하다면 7월에라도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sup>90</sup> 또 핵문제 해결시 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포함한 모든 국제사찰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미국과의 수교 및 우방이 되는 것을 조건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6월 21~24일 서울에서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이 개최되어 장성급회담, 적십자회담,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담 등의 재개에 합의하였다. 이로써 남북관계가 다시 정상화되자 우리 정부는 북측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한 중대제안을 공식발표하였다. 7월 1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의 국가안전보장회의는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폐기에 합의하면 현재 중단상태인 경수로 건설공사를 종료하는 대신 우리 정부가 송전선로 건설에 즉각 착수해서 3년 내에 북핵 폐기와 함께 독자적으로 200만Kw의 전력을 북한에 직접 송전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선언을 발표하였다.<sup>91</sup> 당시 한국을 방문한

<sup>90</sup> 중앙일보, 2005년 6월 18일 참조.

라이스 국무장관은 한국측의 중대 제안이 6자회담의 실질적 진전을 이끌어 내고 회담의 추진력을 계속 유지해 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지지를 표명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와 같이 대북 송전을 제안함으로써 6자회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해 온 북·미간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

<sup>91</sup> 통일부, 통일부장관 ‘중대제안’ 설명 기자회견(요지): 2005.7.12 국가안전보장회의 결과 보고 <[www.unikorea.go.kr/kr/KUN/KUN0101R.jsp](http://www.unikorea.go.kr/kr/KUN/KUN0101R.jsp)>.



# VI

## 제4차 6자회담과 향후 전망



## 1. 제4차 6자회담과 공동성명

제3차 회담 이후 13개월간의 공백을 거쳐 2005년 7월 26일 북경에서 제4차 6자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북한은 NPT체제가 보장하는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과거 연구용 원자로를 핵무기 생산용 시설로 전환했던 사례를 상기시키면서 북한에 존재하는 모든 핵 시설과 물질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회담은 8월 7일까지 13일간 지속되었지만 핵폐기 범위와 평화적 핵 이용 여부를 둘러싸고 북·미간 타협점을 찾지 못함으로써 휴회되었다. 그러나 9월 13일 개최된 2단계 제4차 6자회담에서 미국 측이 북한이 NPT에 복귀하고 국제적 우려가 해소되면 평화적 이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선으로 양보함으로써 경수로 문제에 대한 절충점을 찾았다. 그리고 9월 19일 북한 핵 포기, 북·미 관계 정상화, 북한 체제 안전보장, 대북 경제협력 등을 포괄적으로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sup>92</sup>

공동성명은 북한의 핵 포기과 이에 대한 상응조치를 두 축으로 하고 있다.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의 포기과 함께 이른 시일 내에 NPT에 복귀하여 IAEA의 감독을 수용하며, 미국 등 5개국을 북한 안전보장과 북·미, 북·일 국교정상화 그리고 에너지·교역·투자분야의 협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6자회담 공동성명은 구체적으로 다음 5개 부분의 주요 내용과 더불어 제5차 6자회담은 11월초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sup>92</sup> 외교통상부,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2005.9.19, 베이징) <[www.mofat.go.kr/mofat/mk\\_a008/mk\\_b083/mk\\_c163/1190667\\_52](http://www.mofat.go.kr/mofat/mk_a008/mk_b083/mk_c163/1190667_52)>.

<표 VI-1> 6자회담 공동성명 주요 내용

-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
  - 북한 : 모든 핵무기 및 현존 핵 계획 포기, NPT 및 IAEA 안전조치 복귀
  - 미국 :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 확인
  - 1992년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을 준수하고 이행
  - 북한의 핵에너지 평화적 이용 권리 존중, 적절한 시기에 대북 경수로 제 공 논의
- 국제사회의 규범 준수
  - 북·미 : 상호 주권 존중, 평화 공존,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 정상화 조치
  - 북·일 : 평양선언에 따라 과거와 현안 사항 해결 및 관계 정상화 조치
-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의 협력
  - 5개국 : 북한에 에너지를 지원할 용의 표명
  - 남한 200만KW 전력 공급에 관한 2005.7.12 제안 재확인
-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공동노력
  -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 개최
- 합의 이행 원칙
  -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합의 이행

이번 공동성명은 1994년 제네바합의와는 달리 동북아 6개국의 다자합의라는 점에서 국제적 구속력이 더 강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즉, 북한이나 미국이 합의사항을 자의적으로 폐기하기에는 더욱 많은 외교적 부담을 느끼게 되었으며, 내용면에서도 ‘동결 대 보상’이 아닌 ‘폐기 대 상응조치’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그러나 공동성명은 북한의 NPT 복귀 시점, 핵사찰 방법, 북한의 안전보

장 방식, 북·미, 북·일 관계정상화 속도와 조건, 에너지 지원 형식 등에 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공동성명에 표명된 핵 포기(abandonment)에 대해 미국측은 핵 폐기로 이해하고 있으나 북한측은 ‘동결’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리고 현존하는(existing)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미국은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의 폐기도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HEU 핵 프로그램은 있지도 않다는 기존의 입장에 대한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사실 공동성명이 발표된 직후부터 북한과 미국은 합의문 해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9월 20일 미국이 대북 신뢰조성의 기초로 되는 경수로를 제공하면 즉시 NPT에 복귀하고 IAEA의 안전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미국측이 ‘선 핵무기 포기, 후 경수로 제공’ 주장을 고집한다면 북·미관계는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선 경수로 제공, 후 핵포기’에 대한 북한측 입장이 변하지 않았음을 재확인하였다.<sup>93</sup>

한편, 미 국무부는 6자회담 수석대표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4차 6자회담 종결발언에서 ‘적절한 시점’(appropriate time)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적절한 시점은 “북한이 신속하게 모든 핵무기와 모든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고, 이에 대해 IAEA를 포함한 신뢰할 만한 국제기구에 의한 검증을 통해 모든 당사자가 만족해야 하고, NPT에 복귀하고 IAEA 안전조치를 이행하며 지속적으로 투명성을 증명하고 핵 기술 확산을 중단”하는 경우를 의미한다.<sup>94</sup> 그리고 미국은 2005년 말 KEDO

---

<sup>93</sup> 통일부 정보분석국, 주간 북한동향, 제758호(2005.9.16-22), pp. 14~15 참조.

사업을 종결한다는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미국이 공동성명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북한의 인권상황 등 북한체제의 모든 측면을 인정한다는 입장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와 같이 북한이 NPT에 복귀하고 IAEA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경수로 제공문제를 논의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에 대해 다른 회담 참여국도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애매하게 합의된 내용들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논쟁이 예상된다.

## 2. 6자회담 협상의제 분석

제5차 6자회담 1단계 회의가 2005년 11월 9~11일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북한은 미국이 마카오에 있는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해 취한 북한과의 거래 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였다.<sup>95</sup> 북한은 대북 금융제재 조치들이 신뢰조성이라는 공동성명 정신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이는 국제 범죄행위에 대한 법 집행문제로 6자회담 틀 밖의 이슈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기본적인 신뢰구축을 위해서 북한이 우선적으로 영변원자로 가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핵동결에 대한 상응조치를 담은 완전한 공동성명 이행계획이 확

<sup>94</sup> U.S. Department of State, Sean McCormack, Spokesman, *North Korea - U.S. Statement* (September 19, 2005) <[www.state.gov/r/pa/prs/ps/2005/53499.htm](http://www.state.gov/r/pa/prs/ps/2005/53499.htm)>.

<sup>95</sup> 미국 재무부는 2005년 9월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이 북한의 위조달러 유통과 마약 밀매 대금을 비롯한 불법자금 세탁 등에 관여해 왔으며 ‘우선적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은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했다. 한겨레신문, 2005년 11월 12일 참조.

정되기 전에 핵시설 가동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결국 이번 회담에서 6개국은 의장성명을 통해 공동선언 이행방침을 재확인하였으나, 차기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한 채 휴회에 들어갔다. 한편, 북·미 양측은 금융제재 문제를 별도의 채널을 통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6자회담에서도 북한이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거나 북·미 양측이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먼저 행동할 것을 요구할 경우 협상은 난항을 겪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회담 참여국 모두 협상이 완전히 결렬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바, ‘북한의 핵폐기 대 미국의 안전보장’이라는 큰 원칙이 유지되는 한, 6자회담은 최종적인 합의를 도출할 때까지 협상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 2단계 5차 6자회담이 재개되면 공동성명에 합의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협상을 통해 결정되겠지만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합의사항을 단계적으로 실천해 가면 북핵문제 해결과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경로를 밟게 될 것이다. 즉, 북한체제 보장 및 한반도 평화 정착 논의, 북한의 NPT 복귀와 IAEA 사찰 수용, 북한 핵폐기 및 검증,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의 순서로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이에 상응하는 대북 지원조치들이 논의될 것이다.

## 가. 북한 안전보장

우선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의제는 북한의 안전보장을 위한 방식과 수준의 문제이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 불가침 조약 체결을 요구한 바가 있으나, 북한의 안전보장은 각국 의회의 비준을 필요로 하는 국제조약 형식으로 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미국은 역사상 불가침을 조약으로 보장한 사례가 없다. 한편, 미국은 3차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폐기에 합의하고 핵개발을 동결하면 5개국이 공동으로 잠정적인 안전보장을 선언하고 모든 핵프로그램이 완전히 폐기되면 항구적인 안전보장안을 제공한다는 2단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이 미국측 제안을 수용한다면 대북 안전보장은 5개국의 최고 지도자가 북한을 침공하거나 김정일 정권을 전복시키지 않는다는 정치적 선언을 문서로 보장하는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5개국 지도자의 공동선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안전보장은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후 북·미, 북·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착시킴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북·미, 북·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협상 또한 북한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후 실질적으로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향후 6자회담의 협상은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형식으로 시작되어도 본격적인 협상은 결국은 북한의 NPT 복귀와 IAEA 사찰 수용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될 것이다.



## 나. 핵폐기 협상

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의 핵심 쟁점은 핵폐기 범위와 대상, 검증방식 등이 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이 구상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모든 핵’ 포기에는 기본적으로 다음 4가지 이상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① 1994년 제네바합의에서 동결을 약속했던 5MW 연구용원자로, 50MW 흑연감속로, 200MW 흑연감속로, 방사화학실험실, 핵연료제조공장 등 5개 핵시설, ② 2003년 5MW 원자로를 재가동하여 생산한 플루토늄, 폐연료봉 8,000여개를 재처리하여 추출한 플루토늄, ③ 1992년 1차 북핵 위기 발발 이전에 비축한 플루토늄, ④ 2차 북핵 위기를 촉발시켰으나 북한이 부인하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 등.

미국은 이와 더불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 핵물질, 시설 등의 폐기를 요구할 것이다.

미국은 3~6개월간의 핵동결 준비기간에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공개하는 ‘기초 신고’를 하면, ‘기초 신고’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5개국과 6자회담 참여국인 한국과 일본 그리고 IAEA가 참여하는 ‘7개국 + 1 국제기구’에 의한 검증작업에 들어간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96</sup> 한편, 북한은 IAEA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편승하여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불평하며, IAEA를 제외한 6자회담 틀 내에서 검증단을 구성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적인 검증절차에 관해서도 북·미간 격론이 예상된다. 미

---

<sup>96</sup> 연합뉴스, 연합뉴스 속보, 2004년 1월 24일 참조.

국은 북한의 의심시설에 대한 IAEA의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접근을 허용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즉, 핵물질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핵연료 주기관련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환경시료 채취 지역의 확대를 포함하고 있는 IAEA의 강화된 안전조치 체제(SSS)에 의한 사찰을 받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 으로서는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사찰에 대해 주권침해라면서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북한은 주한미군의 핵무기 보유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 들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한반도 전역에서 모든 핵무기를 철거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북한은 경기도 오산시와 전라북도 군산시의 미 공군기지 등 주한미군의 주요 기지에 대한 사찰은 물론 핵잠수함·항공모함의 기항도 허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해외주둔 미군의 시설을 제3국 특히, 적성 국가에 공개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핵 폐기 이행과정에서 주한미군 시설을 포함한 남북한 상호 사찰을 요구할 경우 이를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사찰 순서와 관련해서, 북한은 동시 사찰을 원하겠지만 미국은 북한이 성실하게 사찰 받은 것을 확인한 뒤 주한미군에 대한 사찰에 응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투명성을 확보한 이후 인권·미사일 문제 등을 관계정상화의 새로운 전제조건으로 제시할 가능성을 우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핵사찰 수용과 국교정상화의 동시 행동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북·미 갈등관계를 핵문제를 둘러싼 제한적 대결이 아니라 전면적인 체제대결로 해

석하고 있는 바, 이 시점에서 북·미, 북·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북핵문제와 관계정상화’ 일괄타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여하튼 핵사찰 범위를 둘러싼 협상 시점은 6자회담의 최종적인 성패를 가름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다. 대북 경제지원

IAEA는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하여도 핵사찰 검증이 완료되기까지는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폐기에 합의하면 북한에 대해 에너지를 제공하고, 200만KW의 전력을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송전선로 건설에 즉각 착수할 예정이다. 그리고 3년 내에 송전선로 건설작업을 완료하여 북한의 핵폐기와 함께 전력을 북한에 공급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sup>97</sup> KEDO는 제네바합의에 의해 경수로 건설이 완공될 때까지 연간 중유 50만t을 제공하였는바, 송전선로 건설기간 동안에는 이에 상응하는 양의 대북 에너지 지원이 실시될 것이다. 그리고 대북 송전이 시작되면 에너지 지원은 종료될 예정이다.

경수로 제공 문제는 향후 북한이 완전한 핵폐기를 실시할 경우 6자회담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다. 6자회담에서 대북 경수로 제공을 확정할 경우, 경수로 건설을 새롭게 착공하기 보다는 기존의 신포 경수로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경제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수로를 새로 건설할 경우 5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

---

<sup>97</sup> 송전선로 건설비용은 송전방식에 따라 1조5,500억 원~1조7,200억 원, 그리고 발전비용은 매년 6,500억 원~8,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통일부, 2005년 국정감사: 중대제안(대북송전계획) <[www.unikoreago.kr/kr.KUN/KUN0602L.jsp](http://www.unikoreago.kr/kr.KUN/KUN0602L.jsp)>.

로 추정되는 데 반해, 공정률 35% 상태에서 중단된 신포 경수로 공사를 재개할 경우 약 35억 달러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 신포 경수로 공사가 재개되어 완공될 가능성도 있다.

5차 6자회담에서 부터 북핵폐기에 관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08년까지 3년간 에너지를 제공하고, 2008년부터 대북 송전을 실시하게 될 것이다. 2011~15년 사이에 경수로 건설이 완공되면 대북 송전도 중단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은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 비용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분담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경수로 지원을 결정할 경우에도 6자회담 참여국의 분담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북지원에 따른 재정 분담 문제는 북한의 핵폐기 과정 및 북·미, 북·일 관계정상화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미국은 수출통제법 및 적성국교역법(Trading With the Enemy Act)에 의거하여 북한에 대해 포괄적인 봉쇄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해외자산통제규정을 제정하여 미국내 북한 자산을 동결시키는 한편, 무역·금융·외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의 대북 경제교류를 금지하였다.<sup>98</sup> 그 후 미국은 해외원조법에 의해 대북 식량지원을 금지하였고, 통상법, 수출입은행법 등에 의거하여 미국 기업은 물론 다른 서방국가의 기업들이 북한과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을 더욱 제한하였다. 미 국무부는 특히 1987년 11월 29일 KAL기 폭파사건 등을 계기로 북한을 테러

---

<sup>98</sup> Zachary S. Davis et. al., *Korea: Procedural and Jurisdictional Questions Regarding Possible Normalization of Relations With North Korea*, CRS Report for Congress, November 29, 1994, p. 22.

지원국으로 지정하고 수출관리법에 의해 국제금융기구들의 대북 지원을 금지하였다. 또한 중동지역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규제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 확산 국가로 지정하여 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법 등에 의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1988년 7월 7일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하여 사회주의 국가들과 관계개선 의지를 천명하자 미국도 이에 호응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일부 완화하였다. 1988년 10월 미국 정부는 외교관들에게 제3국에서 북한 외교관들과 중요한 문제들에 관해 논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고, 학술·문화교류 목적의 비공식적인 민간차원의 북한방문을 장려하였으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자들의 대북한 수출을 사안별로 허용하였다.<sup>99</sup>

제네바합의를 체결한 이후 미국은 1995년 1월 20일 여행, 언론 취재와 통신, 금융거래, 특정품목에 대한 교역허용, 원자력분야 사업 등 4개 부문에 걸쳐 제 1단계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제 1단계 경제제재 완화조치는 관련법규를 개정하지 않고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가능한 부분에 국한되어 상징적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즉, 적성국교역법에 의한 전반적인 수출금지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해외체류중 이더라도 재무부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북한과 상업거래를 할 수 없으며, 미국은행을 이용한 대북 송금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 후 1999년 9월 17일 적성국교역법·방산물자법·수출관리법 등 3개법에 근거하여 행정부처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실시하였

---

<sup>99</sup> *Ibid.*, p. 5.

다.<sup>100</sup>

미 의회는 9·11테러 이후 테러단체들의 자금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돈세탁(Money Laundering)을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애국법(Patriot Act)을 제정하였다. 북한이 마약 제조, 달러 위조, 미사일 수출 등의 불법 거래를 통하여 핵무기 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판단한 부시 행정부는 법무부·국무부·국방부 등 14개 수사기관을 동원해 일본·대만·한국 등의 수사기관들과 공조해 북한의 불법 해외자금을 추적해 왔다.<sup>101</sup> 미국 수사기관들이 중국 마카오의 금융기관이 북한과 불법거래를 하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한 후 미 재무부는 2005년 9월 애국법에 의해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을 ‘우선적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여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시켰다. 미 재무부는 10월 1일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련되었다고 판단되는 8개 북한 무역상사가 미국 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에 대해 동결령을 내렸다.<sup>102</sup> 이들 회사와 거래가 있는 미국 내외 모든 기업의 미국 내 자산 및 기업 활동에 대해서도 동결 조치가 적용된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불법거래를 차단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제2차 북핵위기가 발생하자 2002년 12월 KEDO 지원금을 중단하였다. 2003년 1월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NPT 탈퇴를 선언하자 부시 행정부는 UN을 통한 대북 경제제재를 모색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중국·러시아 등의 지지를 확보하기

<sup>100</sup> The White House Briefing Room, Press Briefing by Joe Lockhart, September 17, 1999 <<http://www.fas.org/news/dprk>>.

<sup>101</sup> 한국일보, 2005년 9월 9일 참조.

<sup>102</sup> U.S. Department of State, USINFO.STATE.GOV, *Treasury Identifies Eight North Korean Weapons Proliferators* <[usinfo.state.gov/is/Arcjove/2005/Oct/21-616972.htm](http://usinfo.state.gov/is/Arcjove/2005/Oct/21-616972.htm)>.

어렵게 되자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게 되었다.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파기한 이후 미 상원은 제네바합의가 무효화되었다는 인식하에 대북 경제제재에 관련된 기관들이 1999년 9월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조치가 실시되기 이전 수준의 제재조치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한 북한 민주주의법(North Korea Democracy Act of 2003) 제정을 추진하였다.<sup>103</sup> 그러나 부시 행정부도 북한이 4차 6자회담 공동성명에 따라 핵폐기 조치를 실시하면 다시 단계적으로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에 테러지원국 해제의 전제조건으로 테러 반대 공개선언, 유엔 테러방지협약 등 국제조약 가입, 과거 테러행위에 대한 설명, 일본 적군파 요원 추방 등 4가지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sup>104</sup> 북한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 미 국무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금융기관의 대북 차관제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 라. 북·미관계 정상화

6자회담에서 핵문제와 체제안전보장에 관한 합의가 도출되면 미국과 북한은 관계개선을 위한 양자회담을 개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북·미 관계개선 협상도 협상의제 선정에서부터 격렬한

<sup>103</sup> U.S. Senate. *S. 145, North Korea Democracy Act of 2003* (January 13, 2003); Dianne E. Rennack, *North Korea: Economic Sanctions*, CRS Report for Congress, Updated (January 24, 2003).

<sup>104</sup> Larry Nicksch, et. al., *North Korea: Terrorism List Removal?* CRS Report for Congress (July 15, 2000).

논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미국측은 미사일, 생화학 무기, 재래식 군비태세, 테러, 인권 문제 등을 모두 협상의제로 올려놓고 포괄적으로 협상하기를 원할 것이다. 한편 북한은 미사일, 경제제재 해제, 국교정상화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를 바랄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국과 북한은 핵·미사일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그러나 생화학무기, 재래식 군비태세, 인권문제 등은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이 새로운 협상안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양측간에 협의해 온 적이 없다. 따라서 북한은 부시 행정부가 새로 제시한 안건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는 2004년 10월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정부기구(NGO)를 지원하고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 및 난민 신청자격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북한인권법(North Korea Human Rights Act of 2004)을 통과시켰다.<sup>105</sup> 부시 대통령은 이 법에 따라 2005년 8월 19일 레프코위츠(Jay Lefkowitz) 전 백악관 국내정책 부보좌관을 대북인권특사에 임명하였다. 그리고 북한인권법에 의해 북한의 인권증진, 대북방송 확대, 탈북자 지원 등을 위해 매년 200만 달러, 4년 동안 총 9,600만 달러를 지원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에는 북한 정권교체는 물론 대북 경제 제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미 의회는 2005년 3월 3일 민주주의증진법(Advance Democracy Act of 2005)을 상·하 양원에 동시 상정하였다.<sup>106</sup>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국무부 내에

<sup>105</sup> U.S. House of Representatives, *H.R. 4011,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March 23, 200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통일논의 리뷰, 통권 제11호, 2004년 3/4분기, pp. 235~261 참조.

<sup>106</sup> U.S. House of Representatives, *H.R. 1133, ADVANCE Democracy Act*



‘민주화 운동 및 이행’ 담당부서를 신설하고 해외공관들과 함께 비민주국가들의 민주화 운동을 적극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특정 국가를 그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았으나, ‘폭정의 전초기지’라고 지목한 북한·이란·쿠바·미얀마·벨로루시아·짐바브웨 등을 주로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에서 인권 및 민주화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협상카드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인권개선과 민주주의 증진을 북·미관계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강력히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미사일 개발·수출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할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도 북한의 미사일 개발·수출 문제를 핵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취급하였다. 당시 미국은 미사일 협상을 통해 북한의 이란·시리아 등 중동지역에 대한 미사일 수출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사정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 이상의 미사일 및 관련 부품·기술의 이전을 통제하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할 것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미사일 개발·생산·배치는 자위권에 속하는 문제라고 주장하였으며, 미사일 수출은 향후 3년간 해마다 10억 달러를 보상할 경우 중단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sup>107</sup>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10월 북한을 방문한 당시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에게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는 대가로 제3국에서 북한 인공위성을 대리 발사해 주고, 경제제재 완화 및 경

---

*of 2005 (March 3, 2005) <[www.theorator.com/bills109/hr1133.htm](http://www.theorator.com/bills109/hr1133.htm)>.*

<sup>107</sup> 북한은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부품, 이동발사대 차량 그리고 미사일 기술을 중동 국가에 수출하여 연간 5억 달러 정도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준익, 북한 핵·미사일 전쟁 (서울: 서문당, 1999), p. 310 참조.

제협력 확대 등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면 중·단거리 미사일 수출을 포기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sup>108</sup> 그 후 2000년 11월 1~3일 개최된 제6차 북·미 미사일협상에서 양측은 장거리 미사일 대리 발사 및 중·단거리 미사일 수출 중단에 대한 보상 문제에 관해 일부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미사일 개발 규제 범위, 인공위성 대리 발사시 북한 기술자 참여 여부, 그리고 검증 방법 등 협상안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향후 미사일협상이 재개되면 북·미간에 적절한 보상수준 및 합의 이행의 검증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미사일 문제는 핵문제와 달리 이를 강제적으로 규제할 국제적 규범이 없다.<sup>109</sup>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제네바합의 위반을 법적 근거로 삼아 이를 중단할 것을 강요하였지만, 미사일 개발·수출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즉, 미사일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북·미간에 아무런 합의서도 채택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미국은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보상을 통한 해결이라는 보다 융통성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북한은 보상액의 수준을 낮추어 적절한 선에서 타협점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2001년 6월 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에 대

---

<sup>108</sup> U.S. Department of State, *Secretary of State Madeleine K. Albright, Press Conference*, October 24, 2000 <secretary.state.gov/www/statements /2000 /001024b.html>.

<sup>109</sup> MTCR의 법적 성격은 공식적인 국제조약이 아니며, 미사일 부품·기술에 대한 이전 통제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는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의존하고 있다.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수출통제를 전제로 한 MTCR에는 2002년 현재 33개국 이 가입하였다. 한국은 2001.3.26 가입하여 33번째 회원국이 되었고 북한은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김경수 외, 국제 비확산체제와 한반도 대량살상무기 통제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1996), pp. 102~118 참조.

해 생물무기금지협약(BWC)과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하고, 전진배치된 북한군 병력을 후방으로 재배치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생화학무기 문제를 핵·미사일 문제와 분리하여 재래식 무기에 관한 협상의 연장선상에서 논의하려고 할 것이다.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은 자위수단으로서 최소한 남한에서 미군이 물러가기 전에는 논의의 대상조차 될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sup>110</sup> 따라서 미국도 핵·미사일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면 생화학무기 문제를 이유로 국교정상화를 지연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 핵폐기 이후 미사일 협상까지 타결되면 북·미간에는 대사급 외교관계수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생화학무기 및 재래식 병력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별도의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 마. 한반도 평화 포럼

우리 정부는 남북한 군사회담을 통하여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논의할 것을 주장해오고 있다. 남북한은 2004년 2월 3~6일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남북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기존의 남북군사실무회담과는 별개로 쌍방 군사 당국자간 회담을 개최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그리고 2004년 6월 3~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해 해상에서의 우

<sup>110</sup> “미군 철수문제부터 논해야 한다.” 로동신문, 2001년 4월 16일; “미군 철수가 선행되어야 한다.” 로동신문, 2001년 5월 28일.

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중지 및 선전 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sup>111</sup> 그러나 북한은 아직 까지 남북한 군사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남북한 군사회담이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 일본·러시아는 북핵 문제를 해결한 6자회담의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논의하기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일본과 러시아는 북한이 주장하는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닐뿐더러 한국과 같은 실질적 당사자도 아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에서 직접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한반도 평화포럼은 남북한과 미국·중국<sup>112</sup>이 참여하는 4자회담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한·미국·중국 대표간의 4자회담은 1997~99년 모두 6차례 열린 바 있다. 1998년 10월 제3차 본회담에서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각각 논의하는 2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합의하였다. 그 후 남한은 긴장완화 분과위원회에서 군당국자간 핫라인 설치, 군인사 상호방문, 군사훈련 참관 등 신뢰구축 조치의 실시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 북·미 평화협정 문제가 긴장완화 분과위원회 의제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다. 남북한간 입장 차이로 인해 3년간에 걸친 4자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아무런 합의점도 마련하지 못한 채 무산되었다.<sup>112</sup>

<sup>111</sup> 통일부, 통일백서 2005, pp. 41~48 참조.

<sup>112</sup> 통일부 남북대화사무국, 남북대화, 제6호 (1998. 1-1999. 9), pp. 105~116 참조.

향후 4자회담이 재개되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평화협정은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고 미국·중국  
 이 이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한  
 이 서명한 평화협정은 1991년에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 입  
 각하여 남북한 상호 실체를 인정하고 전쟁상태의 종결과 평화공  
 존 관계로의 이행을 천명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  
 평화관리기구 설치,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국제적 보장  
 등과 관련한 조항들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먼저 한·미간에 주한미군의 규모 및 역할 변  
 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sup>113</sup> 이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양해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는  
 한·미동맹의 장애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로써 남북 화해 분위기,  
 한국의 자주국방 능력,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동향과 상호 정치  
 적 관계 등의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즉, 남북한의  
 화해·협력의 심화되고, 남한의 자주국방 능력이 강화되며, 미·

중간 안보협력이 증진되지 않으면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역  
 할변화 수준을 확정짓기 어려울 것이며, 이와 더불어 4자회담에  
 서 평화체제 구도에 관한 협상도 쉽게 타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궁극적으로 4자회담을 통해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핵문제 해  
 결을 위해 성립된 6자회담은 동북아 국가들의 공동생존과 번영을  
 목표로 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로 발전되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다자안보대화의 효용성에 대해서 일반적

<sup>113</sup> 한·미 양국은 2003년 7월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3차 회의에서 한·미  
 연합지휘 관계 연구 의제화에 합의했고, 2004년 1월부터 이에 대한 공동연구를  
 시작했다.

으로 회의적인 태도를 표명하고 있다. 내정 불간섭 원칙에 입각한 다자간 안보대화는 테러척결,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지역 분쟁 해결 등 안보 현안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의 외교· 안보팀은 “임무가 연합을 규정하는 것이지 연합이 임무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sup>114</sup> 다자안보대화의 효율성에 대해 회의적인 부시 행정부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이 먼저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형성을 위해 외교적 주도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북아지역의 다자안보협력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인 한· 중· 일 3국의 공동협력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그러나 최근 역사해석 및 해양도서의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한· 중· 일 3국관계의 실태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향후 이들 3국의 쌍무관계가 현재 상태 보다 훨씬 개선되지 못한다면 6자회담이 동북아지역의 안보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다자안보협의체로 발전되어 나가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sup>114</sup> Andrew Mack, “The United States and the Asia-Pacific: Bilateralism Plus ‘Multilateralism a la Carte,’” David M. Malone and Yuen Foong Khong ed., *Unilateralism and U.S.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Perspectives* (Boulder, Co.: Lynne Rienner Publishers, 2003), p. 393.

# VII

## 결론





제4차 6자회담에서 공동성명 채택에 합의함으로써 북·미관계는 좀 더 진전된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즉, 핵무장을 주장하며 벼랑 끝 외교를 전개해 온 북한의 행태 및 노골적인 대북 군사적 압박을 표명해 온 미국의 태도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구조적으로 제약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공동성명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상은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북한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 내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북한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사찰 문제에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도록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에 대해서도 보상 문제에 대해 더욱 신축적인 태도를 보이도록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미, 북·일 국교정상화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미국·일본이 북한과의 협상과정에서 서로 양보하는 태도를 보여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외교적 창의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대북 경제지원과 관련된 재정분담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러시아가 먼저 참여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은 한반도에서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 모두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며 평화공존을 위한 남북대화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한반도 주변 4국의 동북아정책은 화해와 협력을 지향하면서도 국익우선의 이중성을 깔고 있어 한반도 평화정착에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협

상이 장기화되면 미국·일본 대 중국·러시아를 축으로 하는 느슨한 대립구도를 보이고 있는 동북아 질서는 평화정착을 저해하는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주변4국간의 우호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량역할을 담당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변 4국과의 협력관계를 보다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일본이 평화체제 구축은 물론 향후 통일과정에서도 적극 협력하도록 이들과의 외교·안보 협력관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 김경수 외. 국제 비확산체제와 한반도 대량살상무기 통제 .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1996.
- 남궁곤 편. 네오콘 프로젝트: 미국 신보수주의의 이념과 실천 . 서울: 사회평론, 2005.
- 이범준 공저. 미국외교정책: 이론과 실제 . 서울: 박영사, 1998.
- 장준익. 북한 핵·미사일 전쟁: 최악의 핵전쟁 시나리오 . 서울: 서문당, 1999.
- 한호석. 자주적 민주정부와 자주적 통일정부를 향하여 . 서울: 코리아미디어, 2005.
- Cameron, Fraser. *US Foreign Policy after the Cold War: Global hegemon or reluctant sheriff?*. New York: Routledge, 2002.
- Davis, Lynn E. and Shapiro, Jeremy. ed. *The U.S. Army and the New National Security Strategy*. Santa Monica: RAND, 2003.
- 2004 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 Committee. *Strong at Home, Respected in the World*. The Democratic Platform for America. July 2004.
- Gertz, Bill. *Betrayal: How the Clinton Administration Undermined American Security*. Washington, D.C.: Regnery Publishing Inc., 1999.
- Harrison, Selig S. *Korean Endgame: A Strategy for Reunification and U.S. Disengagemen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
- Jentleson, Bruce W. *American Foreign Policy: The Bush Administration and the Dynamics of Choice* (Special Update). New York: W.W. Norton & Company, 2002.

- Lewicki, Roy J. and Litterer, Joseph A. *Negotiation*. Illinois: IRWIN, 1985.
- Malone, David M. and Khong, Yuen Foong(ed.). *Unilateralism and U.S.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Perspectives*. Boulder, Co.: Lynne Rienner Publishers, 2003.
- O'Hanlon, Michael & Mochizuki, Mike.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New York: McGraw-Hill, 2003.
- Perle, Richard and Frum, David. *An End to Evil: How to Win the War on Terror*. New York: Random House, 2003.
- The Republican National Committee. *Republican Platform 2000: Renewing America's Purpose, Together*. August 3, 2000.
- Wit, Joel S. et. al. *Going Critical: The First North Korean Nuclear Crisi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4.

## 2. 논문

- 안병진. “미국 신보수주의의 사상적 배경: 레오 스트라우스를 중심으로.” 남궁곤 편. *네오콘 프로젝트: 미국 신보수주의의 이념과 실천*. 서울: 사회평론, 2005.
- 이범준. “탈냉전기의 미국 외교정책: 클린턴 독트린의 이론과 실제.” 이범준 외 공저. *미국외교정책: 이론과 실제*. 서울: 박영사, 1998.
- Auster, Bruce B. and Whitelaw, Kevin. “Upping the Ante for Kim Jong Il.” *U.S. News & World Report* (July 21, 2003).
- Brinkley, Douglas. “Democratic Enlargement: The Clinton Doctrine.” *Foreign Policy* (Spring 1997).
- Collins, John M. *Korean Crisis, 1994: Military Geography, Military Balance, Military Options*. CRS Report for Congress (April 11, 1994).

- Davis, Zachary S. et. al. *Korea: Procedural and Jurisdictional Questions Regarding Possible Normalization of Relations With North Korea*. CRS Report for Congress (November 29, 1994).
- Eberstadt, Nicholas. *Diplomatic Fantasyland: The Illusion of a Negotiated Solution to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www.nautilus.org/fora/security/0342\\_Eberstadt.html](http://www.nautilus.org/fora/security/0342_Eberstadt.html)>.
- Gaddis, John Lewis. "A Grand Strategy of Transformations." *Foreign Policy* (November/ December, 2002).
- Joseph, Jofi.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Can Interdiction Stop Proliferation?". *Arms Control Today* (June 2004).
- Kerry, John. "If I were President - Addressing the Democratic Deficit." *Foreign Policy* (March/April 2003).
- \_\_\_\_\_. *Remarks at the Veterans of Foreign Wars Convention*. August 18, 2004 <[www.cfr.org/campaign2004/print.php?id=7257&type=pub](http://www.cfr.org/campaign2004/print.php?id=7257&type=pub)>
- Mack, Andrew. "The United States and the Asia-Pacific: Bilateralism Plus 'Multilateralism a la Carte'." Malone, David M. and Khong, Yuen Foong. ed. *Unilateralism and U.S.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Perspectives*. Boulder, Co.: Lynne Rienner Publishers, 2003.
- Niksch, Larry A.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CRS Issue Brief, Updated (June 2, 1995).
- \_\_\_\_\_.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CRS Issue Brief for Congress, Updated (August 27, 2003).
- Niksch, Larry A. et. al. *North Korea: Terrorism List Removal?* CRS Report for Congress (July 15, 2000).
- Park, Han S. and Park, Kyung-Ae. "U.S. lacks options in crisis with Pyongyang." *Jane's Intelligence Reviews* (April 2003).
- Rennack, Dianne E. *North Korea: Economic Sanctions*. CRS Report

- for Congress, Updated (January 24, 2003).
- Rhodes, Edward. "The Imperial Logic of Bush's Liberal Agenda." *Survival*. Vol. 45, No. 1 (Spring 2003).
- Rice, Condoleezza. "Promoting National Interest." *Foreign Affairs*. Vol. 79, No. 1 (January/February 2000).
- Rowen, Henry S. "Kim Jong Il Must Go." *Policy Review*. No. 121 (October & November 2003).
- Squassoni, Sharon A.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How Soon an Arsenal?* CRS Report for Congress, Updated (July 29, 2003).
- Weiner, Rebecca.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to Stem Flow of WMD Material* (July 16, 2003) <cns.miis.edu/pubs/week/030716.htm>

### 3. 기타 자료

- 통일부. 통일백서 .
- 통일부 정보분석국. 주간 북한동향 .
- 통일부 남북대화사무국. 남북대화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통일논의 리뷰 .
- 연합뉴스 .
- 북한연감 .
- 동아일보 .
- 조선일보 .
- 중앙일보 .
- 세계일보 .
- 한겨레신문 .
- 한국일보 .

*The Korea Times.*

*The Korea Herald.*

*The New York Times.*

*The Washington Post.*

*The Washington Times.*

국가안전보장회의. 『평화번영과 국가안보』. 서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2004.

외교통상부. 『제3차 6자회담 결과』. 2004. 6. 28 <[www.mofat.go.kr/mofat/mk\\_a008/mk\\_b083/mk\\_c163/1161198\\_52](http://www.mofat.go.kr/mofat/mk_a008/mk_b083/mk_c163/1161198_52)>.

\_\_\_\_\_.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2005.9.19, 베이징)』 <[www.mofat.go.kr/mofat/mk\\_a008/mk\\_b083/mk\\_c163/1190667\\_52](http://www.mofat.go.kr/mofat/mk_a008/mk_b083/mk_c163/1190667_52)>.

청와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문』. 2003.10.20 <[www.cwd.go.kr/warp/kr/diplomacy/05/calendar](http://www.cwd.go.kr/warp/kr/diplomacy/05/calendar)>.

\_\_\_\_\_. 『한·미 정상회담: 동맹 공고, 북핵 평화적 해결 공동목표』. 2005. 6. 13 <[www.president.go.kr/cwd/kr/archive\\_view.php?meta\\_id=di](http://www.president.go.kr/cwd/kr/archive_view.php?meta_id=di)>.

통일부. 『통일부장관 ‘중대제안’ 설명 기자회견(요지): 2005.7.12 국가안전보장회의 결과 보고』 <[www.unikorea.go.kr/kr/KUN/KUN0101R.jsp](http://www.unikorea.go.kr/kr/KUN/KUN0101R.jsp)>.

\_\_\_\_\_. 『2005년 국정감사: 중대제안(대북송전계획)』 <[www.unikorea.go.kr/kr.KUN/KUN0602L.jsp](http://www.unikorea.go.kr/kr.KUN/KUN0602L.jsp)>.

CIA, Nonproliferation Center. *Unclassified Report to Congress on the Acquisition of Technology Relating to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Advanced Conventional Munitions* (1 January through 30 June, 1988) <[www.cia.gov/cia/publications/bian/bian.htm](http://www.cia.gov/cia/publications/bian/bian.htm)>.

\_\_\_\_\_. *The Acquisition of Technology Relating to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Advanced Conventional Munitions*

- (1 January through 30 June, 2003) <[www.cia.gov/cia/reports/jan\\_jun2003.htm](http://www.cia.gov/cia/reports/jan_jun2003.htm)>.
- Perry, William J. *Review of United States Policy Toward North Korea: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Unclassified Report, Washington, D.C. (October 12, 1999).
- Rice, Condoleezza. *Opening Statement by Dr. Condoleezza Rice*. U.S.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January 18, 2005
- Tenet, George J. Worldwide Threat-Converging Dangers in a *Post 9/11* World. Senate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February 6, 2002 <[www.cia.gov/cia/public\\_affairs/speeches/dci\\_speech\\_02062002.html](http://www.cia.gov/cia/public_affairs/speeches/dci_speech_02062002.html)>.
- The White House.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July 1994.
- \_\_\_\_\_. Briefing Room. *Press Briefing by Joe Lockhart*. September 17, 1999 <[www.fas.org/news/dprk](http://www.fas.org/news/dprk)>.
- \_\_\_\_\_. *Remarks by the President to Students and Faculty at National Defense University*. May 1, 2001 <[www.whitehouse.gov/news/release/2001/05](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2001/05)>.
- \_\_\_\_\_. *Statement by the President*. June 6, 2001 <[www.whitehouse.gov/news/release/2001/06/20010611-4.html](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2001/06/20010611-4.html)>.
- \_\_\_\_\_. *President Delivers State of the Union Address*. January 29, 2002.
- \_\_\_\_\_.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ptember 2002 <[www.whitehouse.gov/nsc/nss.html](http://www.whitehouse.gov/nsc/nss.html)>.
- \_\_\_\_\_. *President Bush Discusses Iraq*. January 14, 2003 <[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3/01/20030114-2.html](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3/01/20030114-2.html)>.
- \_\_\_\_\_. *President Sworn-In to Second Term*. January 20, 2005 <[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5/01/20050120-1.html](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5/01/20050120-1.html)>.



- \_\_\_\_\_. *State of the Union Address*. February 2, 2005 <[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5/02/20050202-11.html](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5/02/20050202-11.html)>.
- U.S. Department of Defense. Nuclear Posture Review [Excerpt]. January 8, 2002 <[www.globalsecurity.org/wmd/library/policy/dod/npr.htm](http://www.globalsecurity.org/wmd/library/policy/dod/npr.htm)>.
- \_\_\_\_\_. *U.S.-D.P.R.K. Joint Communiqué*. October, 12, 2000 <[www.state.gov/www/regions/eap/001012\\_usdprkjointcom.html](http://www.state.gov/www/regions/eap/001012_usdprkjointcom.html)>.
- \_\_\_\_\_. *Secretary of State Madeleine K. Albright, Press Conference*. October 24, 2000 <[secretary.state.gov/www/statements/2000/001024b.html](http://secretary.state.gov/www/statements/2000/001024b.html)>.
- \_\_\_\_\_. Richard Boucher, Spokesman. *State Department Noon Briefing*. March 9, 2001 <[usinfo.state.gov](http://usinfo.state.gov)>.
- \_\_\_\_\_. Richard Boucher, Spokesman.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Press Statement*. October 16, 2002 <[www.state.gov/r/pa/prs/ps/2002/14432.htm](http://www.state.gov/r/pa/prs/ps/2002/14432.htm)>.
- \_\_\_\_\_. Washington File, *Power Says Beijing Talks Show United Opposition to Nuclear Korea*, 25 April, 2003 <[usembassy.state.gov/seoul/www/wh41ai.html](http://usembassy.state.gov/seoul/www/wh41ai.html)>.
- \_\_\_\_\_. *U.S. to Host 5th Meeting o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2 December 2003 <[usinfo.state.gov/topical/pol/arms/03120201.htm](http://usinfo.state.gov/topical/pol/arms/03120201.htm)>.
- \_\_\_\_\_. *Remarks with South Korean Foreign Minister Ban Ki-Moon after Meeting*. March 20, 2005 <[www.state.gov/secretary/rm/2005/43665.htm](http://www.state.gov/secretary/rm/2005/43665.htm)>.
- \_\_\_\_\_. Sean McCormack, Spokesman, *North Korea - U.S. Statement* (September 19, 2005) <[www.state.gov/r/pa/prs/ps/2005/53499.htm](http://www.state.gov/r/pa/prs/ps/2005/53499.htm)>.
- \_\_\_\_\_. USINFO.STATE.GOV. *Treasury Identifies Eight North Korean Weapons Proliferators* <[usinfo.state.gov/is/Arcjo](http://usinfo.state.gov/is/Arcjo)>

ve/2005/Oct/21-616972.htm>.

U.S. House of Representatives. *H.R. 4011,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March 23, 2004).

\_\_\_\_\_. *H.R. 1133, ADVANCE Democracy Act of 2005* (March 3, 2005) <[www.theorator.com/bills109/hr1133.htm](http://www.theorator.com/bills109/hr1133.htm)>.

U.S. Senate. *S. 145, North Korea Democracy Act of 2003* (January 13, 2003).

Wolfowitz, Paul D. *Prepared Testimony of Deputy Secretary of Defens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July 12, 2001 <[www.senate.gov/~armed\\_services/hearings/2001/c01\\_0712a.htm](http://www.senate.gov/~armed_services/hearings/2001/c01_0712a.htm)>.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총서

2003-01	북한의 인권부문 외교의 전개방향	최의철	저	6,000원
2003-0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이우영	저	5,000원
2003-03	『조선녀성』 분석	임순희	저	6,000원
2003-04	북한의 개인송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서재진	저	6,500원
2003-05	21세기 미,중,일,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여인곤 외	공저	8,500원
2003-06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	이헌경	저	5,000원
2003-07	일본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김영춘	저	4,000원
2003-08	중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최춘흠	저	3,500원
2003-09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박영호 외	공저	8,500원
2003-10	핵문제 전개 및 내부 정치변동의 함배와 북한 변화	박형중	저	7,000원
2003-11	미국의 대이라크전쟁 이후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5,000원
2003-12	북한의 후계자론	이교덕	저	4,500원
2003-13	김정일 정권의 안보정책: 포괄적 안보개념의 적용	박영규	저	5,500원
2003-14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전현준	저	4,000원
2003-15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지원 시나리오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3-16	통일에측모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8,000원
2003-17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3-18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3-19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임강택 외	공저	5,000원
2003-20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	최수영	저	3,500원
2003-21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이금순	저	5,500원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윤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F/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 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 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핵심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핵심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3	서재진 외 공저	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i>	서재진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 연례 정세 보고서

200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3~2004		6,000원
200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4~2005		6,000원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 학술회의총서

2003-01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방향	5,000원
2003-02	한반도 평화변영과 국제협력	5,500원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 · 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2004-08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변영과 한·중 협력	9,000원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 · 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2권 1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1 (2003)	9,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2 (200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1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2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1 (2005)	10,000원

## 영문초록

2003-1 KINU Research Abstracts '02	10,000원
------------------------------------	---------

## 협동연구총서

2003-01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10,000원
2003-02	통일정책 추진체계 실태연구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3-03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최진욱 외	공저	10,000원
2003-04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3-0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3-06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 경제분야	이상만 외	공저	10,000원
2003-07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3-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박영규 외	공저	9,000원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2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곤 외	공저	7,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성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설 외	공저	5,000원
2004-1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 I ) :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 I )	김광역 외	공저	4,000원
2004-26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역	저	4,500원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9,000원
2005-08-01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 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 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3-01	중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망: 10기 전인대 1차회의 결과분석		신상진
2003-02	북한 핵문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임강택
2003-03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임순희
2003-04	한미 정상회담과 공조방향		이현경, 박영호
2003-05	일본의 안보개혁과 유사법제 정비		배정호
2003-06	북한 병력제도 변화와 병력감축 가능성		박형중, 정영태
2003-07	11기 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동향 분석		박형중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C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 I ) :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II) : 부시 공화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전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곤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근,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윤,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향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윤,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세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근,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므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므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